

예산춘추

BUDGET & POLICY

2022
첫 번째

Vol. 65



특집

2022년도 예산안 등 국회 심의 주요 내용

현안 진단

디지털세 최종합의의 의미와 대응과제

기획 연재

대전환 시대 재정의 역할



COVER STORY

2022년 봄에는 화사함이 더해가는
풍경을 거닐며 계절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표지 일러스트 ©이신혜 작가



BUDGET & POLICY

예산준추

2022 첫 번째 Vol. 65

발행일

2022년 2월 23일(통권 65호)

발행인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준추 편집위원회

위원장

임명현 기획관리관

위원

이형진 총무담당관

배아형 정책총괄담당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진익 경제분석총괄과장

신동진 인구전략분석과장

오은선 기획예산2담당

최성민 예산분석관

이광근 추계세제분석관

이규민 경제분석관

간사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편집

황록연 주무관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화

02-6788-4619

팩스

02-6788-4686

홈페이지

www.nabo.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bo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bokorea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2266-1897

06

특집

08

SPECIAL 1

2022년도 예산안 등
국회 심의 주요 내용

14

SPECIAL 2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20

SPECIAL 3

2022년 예산은
'2% 부족한' 마스터플랜

26

현안 진단

28

ISSUE 1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TVC)의
구축 전망과 함의

34

ISSUE 2

디지털세 최종합의의
의미와 대응과제

40

ISSUE 3

가계부채 증가구조의
이해와 정책방향



CONTENTS

46

기획 연재

46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R&D 분야 예산

52

대전환 시대 재정의 역할
인구고령화의 도전과
사회정책적 대응

58

WORK & REPORT

58

숫자로 보는 정책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통계 소개

62

국제회의 리포트
OECD 독립재정기구 화상회의

66

NABO 발간보고서 소개

84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88

FISCAL STORY

88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탄소중립의 역습,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92

역사 속 재정 이야기
인플레이션과 재정

96

세금 이야기
알면 알수록 돈 버는 연말정산

100

재정·경제학자 이야기
로렌스 서머스

104

NABO NEWS

106

국회 아트갤러리 작품전





싱그러운 _____ 시작을 알리는 _____



계절

코로나19로 힘들고 고된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찾아온 봄.
초록의 옷음을 가득 머금고 힘차게 발을 내딛어 봄시다.
싱그러운 새 걸음이 따뜻한 바람과 함께 다시 시작됩니다.



특

SPECIAL

집

SPECIAL 01
2022년도 예산안 등
국회 심의 주요 내용

SPECIAL 02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SPECIAL 03
2022년 예산은
‘2% 부족한’ 마스터플랜



2022년도 예산안 등 국회 심의 주요 내용



글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SPECIAL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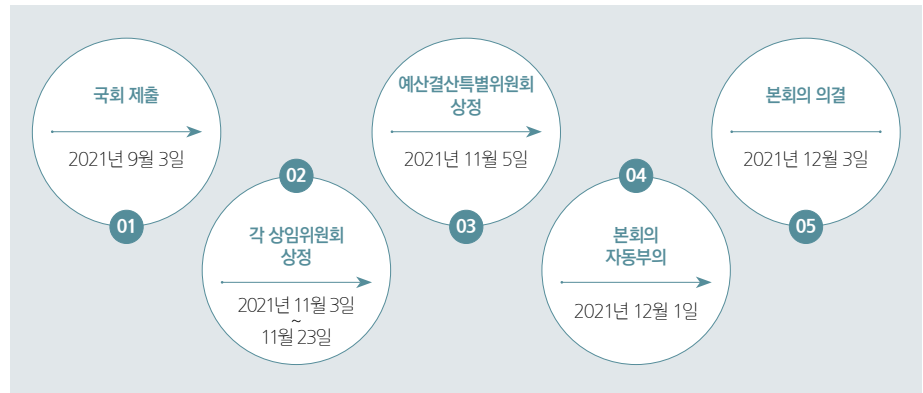
국회는 2021년 12월 3일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역, 재정건전성 측면의 변화 등
국회 심의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국회는 지난 2021년 12월 3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을 심의·의결했다.

이하에서는 정부 예산안 등에 대한 주요 수정내역, 재정건전성 측면의 변동내역 등 국회 심의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2022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경과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 심의의 주요 내용

총수입 심의 결과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은 548.8조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이 중 4.7조원을 순증(6조 8,947억원 증액 및 2조 1,745억원 감액)하여 553.6조원으로 총수입을 확정했다.

표 1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 국회 심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증액	감액	순증감
회계	6,300,859	△2,174,487	4,126,372
(국세수입)	(6,300,700)	(△1,565,800)	(4,734,900)
(세외수입)	(159)	(△608,687)	(△608,528)
기금	593,832	0	593,832
합계	6,894,691	△2,174,487	4,720,204

자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총수입 4.7조원을
순증하여 553.6조원
확정

총수입에 대한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①코로나 피해 사업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 납기연장(2021년→2022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에 따른 2022년도 세입 증가 요인,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동 효과 등을 반영하여 국세수입 예산을 4조 7,349억원 순증액했고, ②고용보험요율이 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기금 수입 중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분담금 예산을 각각 2,964억원 증액했다.

총지출 심의 결과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4조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이 중 3.2조원을 순증(8조 7,788억원 증액 및 5조 5,520억원 감액)하여 607.7조원으로 총지출을 확정했다.

구분	증액	감액	순증감
회계	6,709,370	△2,853,478	3,855,892
기금	2,069,432	△2,698,512	△629,080
합계	8,778,802	△5,551,990	3,226,812

자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중소기업·에너지(+1.0조원), 교육(+1.0조원), 보건·복지·노동(+0.9조원) 분야의 증액규모가 컸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12대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일반·지방행정 등 8개가 있다. 이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1.0조원), 교육(+1.0조원), 보건·복지·노동(+0.9조원) 분야의 증액규모가 컸다. 감액 분야는 R&D,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4개이며, 국방(△0.6조원) 분야의 감액규모가 가장 컸다.

구분	2021 본예산	2022 예산안(A)	2022 확정예산(B)	증감(B-A)	증감률
1. 보건·복지·노동	199.7	216.7	217.7	+0.9	+0.4
2. 교육	71.2	83.2	84.2	+1.0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18.0)	(18.9)	(19.1)	(+0.2)	(+1.1)
3. 문화·체육·관광	8.5	8.8	9.1	+0.3	+3.4
4. 환경	10.6	11.9	11.9	+0.01	0.0
5. R&D	27.4	29.8	29.8	△0.03	△0.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30.4	31.3	+1.0	+3.3
7. SOC	26.5	27.5	28.0	+0.4	+1.5
8. 농림·수산·식품	22.7	23.4	23.7	+0.3	+1.3
9. 국방	52.8	55.2	54.6	△0.6	△1.1
10. 외교·통일	5.7	6.0	6.0	△0.1	△1.7
11. 공공질서·안전	22.3	22.4	22.3	△0.1	+0.4
12. 일반·지방행정	84.7	96.8	98.1	+1.3	+1.3
※지방교부세 제외시	(32.9)	(32.7)	(32.3)	(△0.4)	(△1.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1. 12. 3.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내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4,000억원), 소상공인지원(융자)(+6,000억원), 지역신용보증지원(+4,904억원) 사업이 증액됐고, 방역·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663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4,846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1,119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사회사랑상품권 발행 지원(+3,650억원)과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2,394억원) 사업도 각각 지역사회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3~5세 누리보육료 단가 인상을 위해 증액됐다.

표 4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주요 증액사업

(단위: 억원)

부처	세부사업	증감내역			증액사유
		예산안	확정예산	증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18,436	22,436	4,0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소상공인 지원(융자)	36,000	42,000	6,000	소상공인 융자금 규모 확대
	지역신용보증 지원	-	4,904	4,904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8,704	14,368	5,663	의료기반 손실보상 확대 등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9,162	14,008	4,846	코로나 치료제 구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1,530	32,649	1,119	코로나 예방접종 확대 등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02	6,052	3,650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5,897	38,290	2,394	누리보육료 단가 인상

자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액됐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1조 1,000억원)와 국고채이자상환(△7,603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항공통제기 2차(△3,283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1,000억원), 중소기업부 소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2,000억원),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3,700억원)이 있다.

표 5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주요 감액사업

(단위: 억원)

부처	세부사업	증감내역			감액사유
		예산안	확정예산	증감	
기획재정부	예비비	50,000	39,000	△11,000	예비비 재원 소요 감소
	국고채이자상환	164,263	156,660	△7,603	국고채 발행 규모 축소
방위사업청	항공통제기 2차	3,283	0.3	△3,283	집행가능성 고려
산업통상자원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2,267	1,267	△1,000	사업실적 저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6,600	4,600	△2,000	자펀드 미투자 규모 고려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99,000	95,300	△3,700	집행가능성 고려

자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채무(D1) 전망은
정부 예산안 기준
1,068.3조원에서
1,064.4조원으로
3.9조원 감소

재정건전성 측면 변화

국회 심의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해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예산안 기준보다 1.5조원이 개선(총수입 4.7조원 순증 및 총지출 3.2조원 순증)됐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0.6조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변동규모가 통합재정수지 변동규모보다 작은 이유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요인 등을 반영하여 4대 사회보장성기금의 총수입을 5,938억원 증액하고, 총지출은 3,054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해당 규모만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¹⁾

또한 2022년도 국가채무(D1) 전망은 정부 예산안 기준 1,068.3조원에서 1,064.4조원으로 3.9조원 감소했다. 이는 국회 심의 결과, 정부 예산안 기준보다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2022년 국고채 순발행 계획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표 6 2022년도 예산안 재정건전성 측면 변화 (단위: 조원, %, %p)			
구분	예산안(A)	확정예산(B)	변동(B-A)
통합재정수지	△55.6	△54.1	1.5
관리재정수지	△94.7	△94.1	0.6
국가채무(D1)	1,068.3	1,064.4	△3.9
(GDP 대비 %)	(50.2)	(50.0)	(△0.2)

주 단위 차이에 따라 변동 결과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부대의견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채택된 부대의견에는 재정정책·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특정 부처 또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재정정책·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①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시 재정 여건 및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추진방안 마련, ②집합금지·제한 업종에서 제외된 여행·숙박 등 업계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다음 특정 부처 또는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①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조방식 변경 방안 마련(기획재정부와 환경부), ②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시 가구원 수 및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한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교육부), ③희소 금속 비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주문했다.

1) 관리재정수지 개선분(0.6조원) = 통합재정수지 개선분(1.5조원)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개선분(0.9조원)

그림 2 |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주요 부대의견

- ☑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시 재정 여건, 경제상황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 ☑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에서 제외된 공연, 체육, 여행, 숙박 업계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 ☑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해 법인의 경우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보조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 교육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시 역차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 수 및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한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 ☑ 국방부는 병 내일 준비지원 사업의 소득역진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소 금속 비축을 위해 핵심광종 선정·구매 및 수입체계 다변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자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마치며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12월 3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 결과, 총수입 증가에 따라 정부 예산안 기준보다 관리재정수지가 0.6조원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도 0.2%p 하락해 재정건전성이 소폭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22년도에도 총지출 규모(607.7조원)가 총수입(553.6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4.1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94.1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는 2021년도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108.4조원 증가한 1,064.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 47.3%(본예산 기준)에서 2022년 50.0%로 2.7%p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의 성과 및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향후에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원활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글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SPECIAL 02

2021년 세법개정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의 입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탄소세 도입안 등 추후 논의해야 할 과제 또한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됐다.

들어가며

국회는 2021년 12월 2일과 9일, 2022년 1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2021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2년도 총수입 예산은 553.6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 548.8조원 대비 4.7조원, 추경예산 514.6조원 대비 39.0조원 증액된 것이다.

표 1 2021년 개정세법 현황

국세(17개 법률)	지방세(4개 법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논의사항

2021년 세법개정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입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세부적으로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개정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첫째, 소득세 분야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과세체계의 정비를 목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 기준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현행 대비 200만원 인상했으나, 우리나라의 소득기준금액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제도 확대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 우려가 제시됨에 따라 ‘향후 세제개편 시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넘지 않는 방향에서 충실히 운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한편 의원발의안으로 제안된 가상자산 과세시행 시기 유예안,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등은 여·야 합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했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화됐다.

그 외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정부안 대비 6개월 더 연장한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및 관련 의약품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10%p 인상했다. 2021년 기부분에 대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 대비 5%p 한시상향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2021년 세법개정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액
인상 등 서민·취약계층의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의 입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둘째, 법인세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확대와 고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분야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동 분야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1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일자리 회복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의 취업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1~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미래 첨단기술 분야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수소, AI, 게임 분야 기술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논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기술에 수소 분야 기술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주요 기술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등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로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추가¹⁾하는 내용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2년 1월 6일)이 발표됐다.

셋째, 소비세 분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및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 지방분권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업자 지원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따른 세액공제²⁾를 재도입했다. 아울러 시행령으로 규정한 공제한도를 상향입법하도록 수정했다. 그 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부과 제외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대응기금 재원 등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또한 제2단계 재정분권³⁾ 추진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상향조정 했다.

한편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정부안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는 등 당초 조세특례 도입목적이 달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종료됐다.

1) 탄소중립, 미래차, 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12대 분야 235개 기술→13대 분야 260개 기술)

2)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3) 지방소비세는 2010년 부가가치세액의 5%를 재원으로 신설된 이후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이양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됨. (2014년 11%, 2019년 15%, 2020년 21%). 이후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2021년 7월 28일)에 따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은 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로 인상됨

표 2 2021년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항목

주요 개정방향	주요 개정항목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금액기준 상향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1년 지출된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 일시 상향 ☑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구조 전환 지원	☑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백산·배터리) R&D 세액공제 신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조성	☑ 납부자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상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부과 제외기준 상향

자료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및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가결된 국세 분야 개정세법의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2~2026년간 총 26.9조원(연평균 5.3조원)⁴⁾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소득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1.3조원) 등으로 인해 1.7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4.4조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용 인상(-21.1조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368억원) 등에 따라 21.3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특정외국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세 부담 판정 비율을 상향함에 따라 9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등 기타 세목에서 4,44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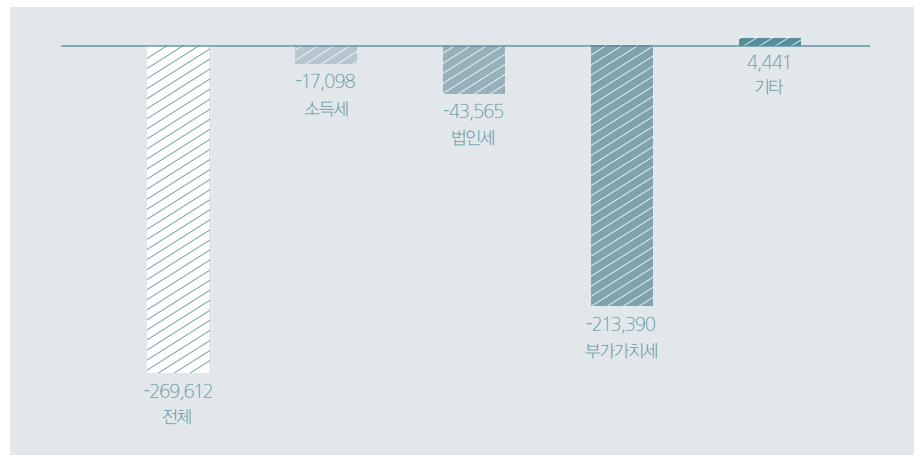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가결된
개정세법 시행에 따라
2022~2026년간 총
26.9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4) 세수효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 기준이며, 일몰 연장 법안의 경우 세수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것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제외할 경우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2026년간 5.8조원(연평균 1.2조원)임

그림 1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2022~2026년 누적)

(단위: 억원)



자료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및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세목별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단위: 억원)

세법개정 주요항목	연평균	2022~2026년 누적
(소득세)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인상	-2,628	-13,139
(법인세)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10,938	-43,75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용 인상	-48,656	-211,716
(기타) 특정외국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관리 강화	+180	+900

자료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및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맺으며

2022년 시행 개정세법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서민·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책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적인 논의 과제 또한 상존한다.

첫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의 경우 수소·AI·게임 등 세제지원 기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는 AI·게임 관련 기술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세제지원 기술의 범위 및 선정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근로장려금 제도의 경우 제도확대와 함께 수혜대상 및 지급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제도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 소득보전을 통한 저소득자의 노동참여 고취, 근로의욕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개정세법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나,
탄소세 도입안 등
추후 논의해야 할
과제 또한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됐다.

끝으로 올해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논의됐으나 미반영된 탄소세 도입안 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한 세제개편안 또한 추후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각종 규제정책 및 재정·금융 수단의 활용 여부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세법의 시행에 따라 2022~2026년 동안 26.9조원의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등의 조치에 주로 기인한다. 국세수입은 코로나19 극복과정의 경기회복과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겠지만, 글로벌 금융·통화정책의 긴축전환 등 대내외 충격이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연계될 경우 중장기적인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및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재정소요 역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 재정수입 확충이라는 조세 본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각종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적극적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2022년 예산은 ‘2% 부족한’ 마스터플랜



글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예산은 국가가 맞닥뜨릴 위기를 어떤 목표와 전략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하지만 2022년 예산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차원의 대응이 잘 안 보인다. 주요 국가들에 견주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도 마찬가지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게 뻔한데도 이들의 고통에는 둔감해 보인다. 마스터플랜에 약자에 대한 공감의 빠진 것 같아 아쉽다.



영화 <돈룩업(Don't Look Up)>은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파국을 피하지 못하는 인류의 어리석음을 고발한다. 영화는 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무지에 대한 풍자는 매우 리얼하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섬뜩한 여운이 남을 정도다. 영화 속 재앙은 현실에서 기후위기일 수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일 수도 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삶을 고집한다면 조만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재앙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관료, 기업인들은 과학자들의 경고를 귓등으로 흘린다. 마치 영화 속 배우들처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도 이 영화의 교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화려한 말로 포장된 탄소중립 로드맵은 속 빈 강정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재정계획, 즉 국가 예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예산은 단순히 돈 씹씹이를 따지는 게 아니다. 국가가 맞닥뜨릴 문제점을 어떤 목표와 전략을 세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재정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면밀하게 예측하고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정 철학과 미래 비전이 반영된 국가의 마스터플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마스터플랜으로 보기엔 몹시 초라하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조 6,5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기후대응기금은 산업구조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기 위해 유망한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역대 정부에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번 예산에 이 기금이 반영된 것은 탄소중립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초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전체 규모를 보면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부의 올해 기후위기 관련 예산은 11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7조 3천억원보다 60% 이상 늘었다.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가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 적다. 한국이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프랑스가 39.8%로 한국과 거의 같고 캐나다 42.5%, 영국 45.2%, 미국 45.8%, 독일 49.1% 등이다. 일본은 38%로 한국보다 조금 적다. 이 목표에 따라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양은 한국 2억 9천 1백만 톤, 독일 3억 7천만 톤, 일본 4억 5천만 톤, 프랑스 1억 3천만 톤 등이다.

독일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양이 한국의 1.3배 수준이지만, 예산은 무려 7배 이상 많다. 독일의 2022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81조 6천억원(600억유로)에 이른다. 독일 정부는 애초 370억유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12월 600억유로 규모로 대폭 늘렸다.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양은 한국의 1.5배이지만 예산은 47조 5,400억원(4조 4천억엔)으로 4배 이상 많다. 프랑스는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양이 한국보다 적지만 예산은 26조원 규모로 2배 이상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무려 1,87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에 기후대응기금이 반영된 것은 탄소중립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조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전체 규모를 보면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영국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가 지난해 발생한 기후재난 가운데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15건을 분석한 결과 총 피해액이 1,700억달러(약 20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300억달러(약 35조 6,100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갈수록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액이 가장 큰 재난 10건 중 4건은 아시아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7월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있었던 홍수는 176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냈고, 3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인도, 스리랑카 등을 강타한 사이클론 ‘타우크테’,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 피해를 입힌 ‘야아스’도 피해가 컸다. 한반도는 이들 지역에 비해 운이 좋았을 뿐이다.

상병수당 도입은
고무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마스터플랜의 아쉬움은 기후위기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도 ‘2% 부족’하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83조 4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단 상병수당이 시범적으로나마 도입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일 4만 1,8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아픈 노동자에게 소득과 진료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노동자는 아프거나 다치면 단기간에 근로 능력을 상실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무능력을 의미하고, 이런 상태가 장기화 되면 노동자는 빈곤 상태에 빠진다. 상병수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독일은 이미 1883년 사회보험 급여로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아프면 집에서 쉬는’ 방역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에도 1조 48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임시일용직, 플랫폼 종사자, 한시적 가사노동자 등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통해 소득·고용안전망 보강,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부문의 격차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p 높다. 따라서 다른 나라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의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과감한 재정 지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자영업자 지원은 피해
정도가 아닌 재원
여력에 더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탓에
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생색내기용' 지원에
그쳤다.

지원은 커녕 뒷걸음친 것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자영업자 지원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7.2%나 줄였다. 2021년 1조 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3,650억원이 증액돼 6,053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은 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0~11월 전국 자영업자 52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7만 5,000원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은 8만 6,000원 감소했다. 또 전국 가맹점 매출액은 월평균 최대 1조 8,300억원, 연평균은 최대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빠르게 유인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21년 11월 발표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월매출 30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18.6%였으나 발생 1년 시점엔 38.3%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46.8%로 증가했다. 매출 감소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12.5%였으나, 발생 1년 시점엔 33.8%로 증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43.5%로 증가했다. 월소득 100만~200만원 자영업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11.0%→27.2%→27.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위기의
시대에 왜 ‘큰 정부’가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지난 1년여 동안 각국
정부가 지출한 돈은 무려
17조달러로 전 세계
GDP의 16%에 이른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최소 2022년까지는 일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 더 두터워질 필요가 있다. 그나마 정부가 최근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산 9조 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 9,000억원을 반영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세수 추계 잘못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국가 재정의 마스터플랜과는 거리가 멀다.

마스터플랜이 아닌 임기응변식 지원은 형평성과 충분성 등 각종 논란을 부른다. 논란이 생산적인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최근까지 7차례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효과 분석이 없었다. 그 결과 사업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거나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만 높아졌다. 피해 정도가 아닌 재원 여력에 더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탓에 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생색내기용’ 지원에 그쳤다는 비판도 받는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결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다. 지난해 말 미국 인구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에 미 국민들에게 지급된 두 차례의 지원금(각각 1인당 1,200달러, 600달러 지급)은 1170만명의 저축 능력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다. 가처분 소득 중에서 얼마를 저축했는지 알 수 있는 개인저축율이 2020년 4월 33.8%를 기록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1,400달러를 더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과 자녀세액공제 환급을 통한 간접 지원도 했다. 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융자 상환을 2022년 초까지 유예해주는 대책도 내놨다. 결과는 깜짝 놀랄 만했다. 2021년 9월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총저축액은 코로나 이전에 전주어 2조 7천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1월 9일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고 썼다. 신문은 이런 현상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위기의 시대에 왜 ‘큰 정부’가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지출한 돈은 무려 17조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현금 지원과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풀었고, 그 효과는 지금까지 적중했다. 물론 나라의 공간이 텅텅 빌 정도로 돈을 뿌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공간이 비는 것만 걱정하는 것은 분명 민주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마스터플랜은 단순히 숫자로만 채우는 게 아니다. 약자에 대한 공감 없으면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



현안

ISSUE

진단

ISSUE 01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TVC)의
구축 전망과 함의

ISSUE 02

디지털세 최종합의의
의미와 대응과제

ISSUE 03

가계부채 증가구조의
이해와 정책방향

01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TVC)의 구축 전망과 함의



클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을 보호주의의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TVC) 구축의 시각에서 파악하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벗어나 가치사슬별로 복합적·입체적 협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생겨난다. 한국은 가치사슬별로 최적의 파트너와 일관되고 원칙 있는 철학과 가치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좌우할 첨단 이중용도 기술의 경우, 기술 강국이 모인 미국 주도 TVC 참여는 합리적인 선택지다. 그러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최대 각축장은 TVC가 될 것이므로 TVC 합류국들이 긴밀한 공조로 미중 사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TVC 합류 못지않게 중요하다. 단, 양 진영에 대체불가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국제적 고립을 막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초래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보호주의의 '진영화'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은 고도의 효율을 추구하며 긴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형성한 결과 특정국에 핵심기술을 의존하는 현실의 위험을 일깨웠다. 이는 국가의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에서 두드러졌다. 반도체 산업은 효율성에 입각해 소수 국가·소수 기업 간에 GVC가 고도로 발달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방역을 위한 봉쇄와 재택근무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는 폭증했으나 극소수에 집중된 공급능력의 마비가 심각한 품귀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5나노 이하 첨단 로직 반도체의 경우 전 세계가 과도하게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데 양안관계의 불안정성 고조로 공급망 위험성이 증폭되고 있다.

첨예해진 미중 갈등도 심각한 공급망 교란 요소로 대두됐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G2로 부상하기까지, 이를 지원하며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미국의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WTO 가입 후에도 여전히 '비시장경제' 중국은 보조금 지급, 국유기업 지원, 외국 자본 통제, 기술 탈취 등 여러 '불공정' 무역행위를 이어갔다. 더욱이 민용·군용 모두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첨단 핵심 기술의 확산 하에 서방은 이를 군용이나 민간인 통제에 오남용하는 중국에 가치와 규범의 잣대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양태는 이러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급기야 미국은 2021년 3월 3일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에서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국제질서에 도전할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점차 미중 대립이 양자 간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미국+미 진영' 대 중국 간에 규범과 가치의 경쟁, 심지어 전략 경쟁으로 비화되는 '보호주의의 진영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독자적인 대중봉쇄에 역부족을 느낄 정도로 쇠락했다. 이를 배경으로 글로벌 리더로의 복귀와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의 취임은 서방의 결집을 촉진시키는 변곡점이 됐다. 그 귀착점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뜻 맞는 동맹과 우방을 규합해 반중 공동전선을 펴는 전략이다. 국가 간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핵심 기술과 데이터의 대중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우방국의 협력이 불가피한 점도 이들의 규합을 도왔다. 필자는 점차 미중 대립이 양자 간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미국+미 진영' 대 중국 간에 규범과 가치의 경쟁, 심지어 전략 경쟁으로 비화되는 '보호주의의 진영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기실 미국의 전 재무장관 헨리 폴슨(Henry M. Paulson)은 2018년에 이미 미중 전략경쟁이 초래할 세계경제의 분단을 우려했다. 그는 냉전시대의 '경제적 철의 장막(economic iron curtain)'이 재현된다면 표준과 혁신 시스템의 분단, 규제와 이원화가 심화돼 두 세계는 상호운용성을 잃고 기술 진영, 금융 진영, 무역 진영 등 각자 시스템에 갇힌다고 경고했다. 그의 경고가 바이든 정부에서 현실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TVC)’의 대두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핵심기술의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걸었다. 그는 2021년 2월 취임 직후 4대 핵심기술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의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 14017호(America's Supply Chains)를 발동했다. 2021년 6월 8일 공개된 동 보고서(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는 미국의 반중 공급망 재편 전략의 지침이 된다. 보고서에서 4대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역량 재건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의 산업정책과 유사국과의 대외협력이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계된다. 국내적으로는 미 관료들이 ‘전략적 산업정책’이라 칭하는 ‘혁신경쟁법(USICA)’과 같은 대대적인 산업정책이 부활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품목별로 기존의 GVC에서 중국을 도려낸 뒤 미국의 우방들로만 배타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한다. 백악관은 2월 발간 예정인 최종보고서에서 6대 핵심 분야(군수, 보건제약,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식품)의 대응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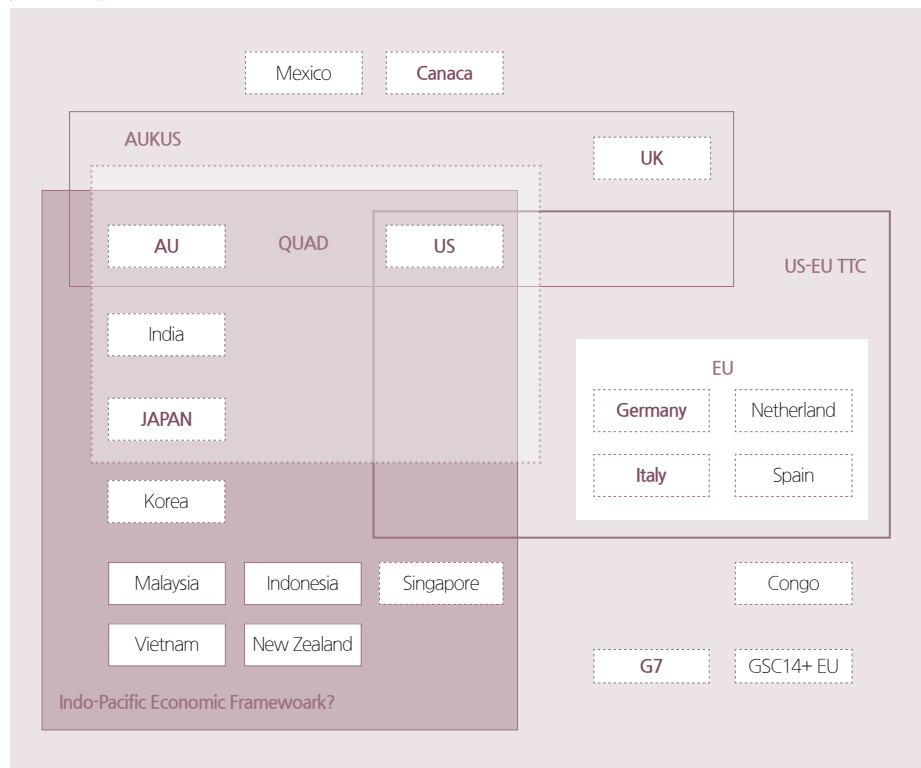
상기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은 GVC나 지역가치사슬(RVC)과 같은 기존 개념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보호주의의 진영화 전략이 투사된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이라는 새 개념으로 설명해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바이든 정부는 TVC 구축의 파트너 선별 기준으로 ‘가치 공유’, ‘유사국’, ‘신뢰’를 전면에 내세운다. 상호의존성이 고도화된 오늘날, 초민감 전략물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신흥-기반 이중용도 기술의 국내회귀(reshoring)를 통한 국내가치사슬(DVC) 형성이 불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회복력 측면에서 위험하기도 하다. 가능하더라도 이런 ‘각자도생(every-country-for-itself)’의 세계에는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난무하게 된다. 미국반도체협회(SIA)는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설 경우 기업의 추가 투자비용이 최소 1조달러에 달해 35~65% 정도의 반도체 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요산업인 전자제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고 전망한다(SIA, 2021).

미국 주도 TVC의 추진 현황과 전망

첨단 이중용도 제품이 아닌 경우도 DVC 구축이 GVC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 이는 ‘made in’이 선호되고 디지털화가 가능하며, 고숙련과 기술이 있고 내수시장이 충분한 일부 업종에 국한된다(Elia, 2021). 애플은 미국의 탈 중국화뿐 아니라 DVC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전량 중국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아이폰에 미국 정부가 10~25%의 고관세를 부과해도 애플은 오바마 정부의 리쇼어링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 같은 제조역량을 잃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 6월 처음 공개된 애플의 2020년도 글로벌 협력업체 200개 사 리스트에서 중국 소재 기업은 51개사(25.5%)로 가장 많으며, 더욱이 2018년(2019년도는 비공개) 대비 9개 사가 늘었다.

교체된 중국 기업은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 곳뿐이다. 2017년 대비 2020년에 추가된 52개 사 중 본사 기준 15개 사가 중국 기업이나, 생산지 기준으로는 156개 사(78%)가 중국에 생산지를 두고 있다. 2020년 미국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대미수출을 가장 많이 늘린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외에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공장을 가동한 나라가 소수였기 때문이다.

그림 1 미국 주도 보호주의의 진영화와 TVC의 외연 확대



자료 김양희(2022)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TVC)'," 외교안보연구원, 국립외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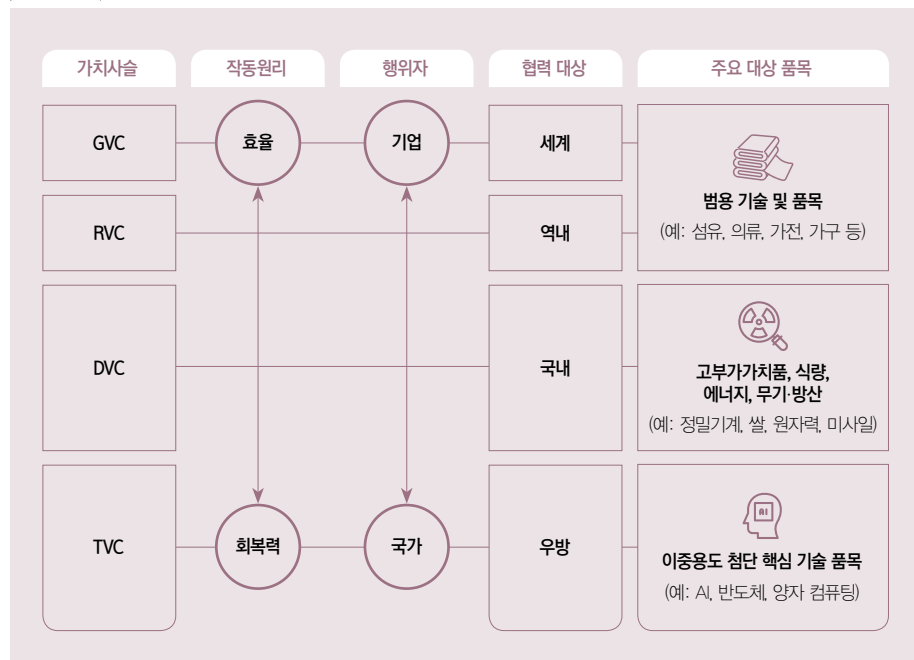
미국의 TVC 구축 범위가 최근 이중의 외연확대 양상을 보인다. 가치사슬 상에서는 제조에서 출발해 후방인 R&D로 확대되고,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전방인 물류로도 확대되어 전 공정을 아우르게 됐다. 다른 한편, TVC 주체는 애초 점(點, 미국)에서 출발해 주요 우방과의 선(線)으로 확대된 뒤, QUAD, G7, 미-EU무역기술위원회(US-EU TTC), 글로벌공급망회의(G14+EU),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면(面)으로 확대되어 이들이 겹겹이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단,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 재계 일각에서는 미국 대중 전략의 사령탑이 없는 듯 하며 산업계는 여전히 공급망보다 해외 수출시장 개방을 선호함에도 CPTPP 가입 전망도 불투명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 주도 보호주의의
진영화와 TVC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시장의
두 측면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국의 TVC 구축 전망은 어떨까? 미국은 기존의 4개 핵심 품목에 2월 공개 예정인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6대 핵심품목을 더한 10대 품목에서 선별적으로 반중 TVC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승자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날 때까지 이 흐름은 좌충우돌하면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주도 보호주의의 진영화와 TVC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시장의 두 측면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우방국 간 신뢰 구축이, 후자는 안보 논리와 시장 논리 간 균형과 조화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 단계 미국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TVC가 착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효율 일변도 GVC가 작동원리, 행위자, 협력 대상, 품목별로 분화돼 일부는 RVC, DVC 등으로 대체되고 또 일부는 장기에 걸쳐 TVC로 전환됨에 따라 4개의 가치사슬이 병존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회복력을 중시하는 첨단 이중용도 기술품목은 TVC로 편입될 수 있다. 여전히 효율을 중시하는 품목은 GVC를 이어가되,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품목은 중국에 남고 고임금이 버거우면 동남아 등지로 이전될 것이다. 시장 접근성과 탈탄소화에 중요한 품목은 소비지에 인접한 RVC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DVC로 재편되는 경우는 국내생산이 유리한 고부가가치 품목과 식량, 에너지, 무기·방산 등에 국한될 것이다. 주요 행위자는 GVC에 가까울수록 기업이고 TVC에 가까울수록 국가다.

그림 2 주요 가치사슬별 특징



자료 김양희(2022)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TVC)'," 외교안보연구소, 국립외교원을 바탕으로 작성



정책적 함의와 대응 방향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을 보호주의의 진영화와 TVC 구축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의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먼저, 보호주의가 진영으로 갈리고 있어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둘째, 그러나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는 한국이 곤혹스러운 양자택일이라는 단면적·이분법적인 시각을 벗어나 가치사슬별로 복합적·입체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생겨난다. 셋째, 미국조차 단독의 공급망 재편이 불가능한 상호의존성의 시대에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다. 따라서 한국은 가치사슬별로 최적의 파트너와 일관되고 원칙 있는 철학과 가치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좌우할 첨단 이중용도 기술의 경우, 기술 강국이 모인 미국 주도 TVC 참여는 합리적인 선택지다. 이를 통해 중국의 기술추격 저지, 기술개발 및 투자비 절감, 규모의 경제 추구, 미국 시장에서의 접근성 확보 등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 주도 TVC 전망은 불투명한 가운데, 신흥 거대 시장이자 매섭게 기술혁신에 나서는 중국도 간과하기 힘들다. 결국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최대 각축장은 TVC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위시해 여기에 합류하는 나라들이 긴밀한 공조로 미중 사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TVC 합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TVC 참여국의 공통된 관심사다. 이를 통해 미중 양강의 극한 대립과 일방에의 줄서기 강요, 자국이기주의를 공동전제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TVC 참여 특정국에 대한 경제보복 여지 약화에도 보탬이 된다. 단, 양 진영에 대체불가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국제적 고립을 막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혹여 초래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3월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전략적 지혜가 절실한 격동의 시대다. 🌐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좌우할
첨단 이중용도 기술의
경우, 기술 강국이 모인
미국 주도 TVC 참여는
합리적인 선택지다.

02

디지털세 최종합의의 의미와 대응과제



클

김완용

송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2021년 10월 8일, OECD/G20 IF는 제13차 총회를 통해 Pillar1과 Pillar2의 핵심 내용을 합의했다. Pillar1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가치창출에 대한 고정사업장 없는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Pillar2는 '저세율국가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디지털세의 개념과 논의 경과 및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종합의안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의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해 본다.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의 개념

BEA(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며, 디지털 경제의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의가 변화하는 특성을 허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①Infrastructure, ②E-commerce, ③Priced digital services의 세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정의하고 있다.¹⁾

이처럼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기업은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업의 가치 창출이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한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에서 생산요소가 투입되어 사업설비를 운영하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 PE)의 개념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측면으로 변화되고,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과세하던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세제의 개념과 과세 근거

디지털세란 구글, 아마존, 애플 및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자국 내에서 납부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실제로 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 행위를 방지하고, 새로운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는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자는 취지로 디지털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 기업의 주된 사용자는 국내 개인이지만, 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본점 소재지 관할로 본다면 국내 매출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각국들은 디지털세의 도입에 대해 자국의 실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와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https://www.bea.gov/data/special-topics/digital-economy>(최종검색일 : 2022. 1. 16), BEA에서 말하는 디지털 경제의 정의는 매년 변화하고 있음

디지털세제의 논의 경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OECD/G20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논의가 진행돼 15개의 Action Plan 이 2015년에 승인됐다(BEPS 1.0). 이후, 2016년 1월 모든 관심국이 G20과 동등한 자격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를 구축했다. OECD의 디지털 경제 TF와 IF는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 및 세원잠식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BEPS 2.0 : 디지털세).

한편,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EU 또한 디지털 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역내 과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하에 조세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과세체계를 주장하기보다는 OECD/G20의 협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EU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임시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과세를 시행하고자 EU경제재정이 사회(ECOFIN)가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세 초안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EU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도입을 찬성하던 일부 EU 회원국들은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디지털세의 현행 합의안

2021년 10월 8일 OECD/G20 IF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하여 Pillar1과 Pillar2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Pillar1〉의 경우,

- ①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으로 하되,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한다.
- ②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에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 지국(Nexus : 과세연계점)으로 판단한다.
- ③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 ④ 매출은 재화 또는 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 기준은 추후 정립하기로 하였고, Pillar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에 구속된다.
- ⑤ Pillar1 도입 시 기존 디지털 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등은 폐지하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그림 1 Pillar1의 Amount A(시장기여분) 배분액 계산절차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Pillar2〉의 경우에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 GloBE)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20일 대외 공개했다.²⁾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consistent) 도입·시행되도록 해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①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실효세율<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개념으로, 연결매출액 7.5억유로(1조원)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되, 정부기구,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을 제외한다.

2) Pillar2는 규칙 ①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GloBE규칙, ②원천지국과세규칙으로 구성되며, 규칙② 도입을 위한 모델규정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②(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IIR)) 자회사 소재지국이 글로벌 최저한 세율 미만인 저세율국가인 경우에는 모회사의 소득이 자회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모회사의 소득에 그 이전된 소득을 산입시킨다는 논리로,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모회사에 대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을 부과한다.

③(비용공제부인규칙: Undertaxed Payments Rule(UTPR))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며, 모회사 소재지국이 글로벌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저세율국가인 경우에는 자회사의 비용이 모회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 비용공제를 부인한다는 논리로, 각각의 자회사 소재국에서 해당 자회사에 대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을 부과한다.

OECD 회원국 중 명목세율이 15% 이하인 나라는 22개이며, 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업 중 최종 모기업기준 매출액 기준(7.5억유로) 충족기업은 245개, 저세율국 22개 나라에 진출한 한국 법인은 총 81개(이들 국가에 연결 종속 법인 총 150여 개)로 조사됐다.³⁾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의 의미

2021년 4월에 바이든 정부가 OECD에 제출한 Pillar1, 2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제안(Presentation by the United States)⁴⁾에서는 “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는 어떠한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당초 Pillar1의 블루프린트⁵⁾에서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automated digital services) 및 소비자 대상 비즈니스(consumer-facing businesses) 적용대상을 논의하던 것을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으로 적용대상 기업을 100개 사 이하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 제안은 기존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가치창출에 대한 고정사업장 없는 과세’를 목적으로 Pillar1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OECD의 논의를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저세율국가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Pillar2를 중심으로 초점을 옮기고자 하는 의도도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⁶⁾

OECD의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제안이 상당부분 반영됐고, 그 의도대로 Pillar1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Pillar2로 인한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12. 20.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 합의”

4) <https://mnrtax.com/wp-content/uploads/2021/04/US-slides-for-Inclusive-Framework-meeting-of-4-8-21-2.pdf>
(최종검색일 : 2022. 1. 16.)

5)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Report on Pillar One Blueprint
<https://www.oecd.org/tax/beps/tax-challenges-arising-from-digitalisation-report-on-pillar-one-blueprint-beba0634-en.htm>
(최종검색일 : 2022. 1. 16.)

6) 최용환 · 홍욱선,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향후과제,” 『조세학술논집』 제37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학회, 2021. 9.

Pillar2의 GloBE 규칙은 조세피난처와 같은 저세율국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전략인 이전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manipulation),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배치(strategic location of IP), 부채이전(debt shifting), 조세협약 쇼핑(treaty shopping)과 같은 국제조세회피 전략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최저세율 이하의 세부담을 가지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의 소재지국에 추가 과세를 인정하는 소득산입규칙이 우선 적용되면, 기존에 저세율국을 활용한 조세회피 전략을 추구하던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미국의 세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디지털세 최종합의에 따른 대응 과제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은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물리적)고정사업장으로 대표되던 국제조세원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고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향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①Pillar1, 2 적용요건을 벗어나기 위해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경영전략 구사 가능성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②Pillar1, 2를 적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정사업장 외의 플랫폼 등을 활용한 매출액 정보는 과세당국이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세 당국 간에 완벽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전 세계 매출과 국가별 수익구조를 완벽히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초국가적 경쟁을 영위하는 영리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과세자료를 전 세계 과세당국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③해외 다국적기업이 본점 이외의 투자형태가 유한회사형태로서 각종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배제된 상황인데, 유한회사는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나 세무신고에 있어서 타 기업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Pillar1, 2를 적용할 경우, 외부감사필 재무제표나 공시된 자료를 활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설치 해외 국가의 징세비용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Pillar1 적용에 앞서, 유한회사에 대한 각 국가의 상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Pillar1, 2 도입에 따른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강화는 기존의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유료전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BEA(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가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에 2019년까지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나, 2021년부터는 ‘Priced’ digital services로 핵심요소가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공짜 점심식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은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물리적)고정사업장으로
대표되던
국제조세원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고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03

가계부채 증가구조의 이해와 정책방향



글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화두는 '가계부채'라 해도 좋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증가액을 관리하면서 총량증가율을 관리하는 비상대책에 가까운 수준의 정책방안을 추진했다.¹⁾ 2022년에도 가계부채 적정 증가율 4~5%라는 정책목표가 설정됐고 이를 위해 총량관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체계가 지속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구조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체계 설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구조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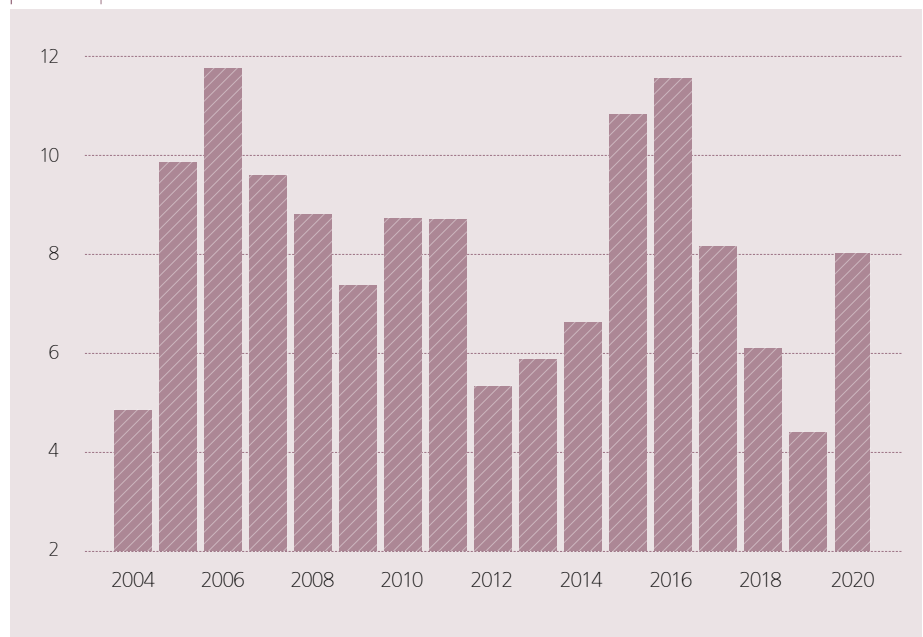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각각 9.5%, 10.4%, 9.7% 증가했다. 두 자리 수에 가까운 증가율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계열 자료는 2002년부터 존재했는데, 지난 20년의 시계열에서 이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한 사례는 두 차례 발견된다(그림 1 참조). 세계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5~2007년 기간이 한 사례이고, 2015~2016년 기간이 다른 하나다. 2020년은 세 번째 가계부채 급등기였던 셈이다. 서술의 편의상 각 증가 기간을 순서대로 1기, 2기, 3기로 부르도록 하자.

세 기간은 드러난 가계부채 증가율은 비슷하게 높았지만, 부채 증가의 동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유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가계신용통계의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그리고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공식통계에서 더 이상의 세분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에는 세 항목의 대출이 들어있다.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다. 일반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발생하는 대출이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주택단지에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양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이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 용도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이다.

지난 20년 가계부채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한 사례는
세 번 있었는데,
각 사례마다 증가의
원인은 달랐다. 최근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주도했다.

그림 1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가계신용통계」 한국은행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1. 10. 29.

1기 가계부채 증가는 일반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동반한 가계부채 증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때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역사적 경험은 적지 않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다. ‘주택가격 상승 →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주택매입수요 증가 → 주택가격 상승 →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주택매입수요 증가’의 순환구조가 형성되며 부채와 가격이 지속불가능한 수준의 거품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주택가격은 이른바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2003년 무렵부터 상승세가 시작됐는데, 향후 가격상승을 기대해 매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매입하는 현상이 1기 대출급증기의 특징이었다. 이제는 표준화된 거시건전성 제도로 자리 잡은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규제제도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제도의 체계화가 1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주요 금융정책방안이었는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된다.

2기 가계부채 증가는 집단대출이 견인했다. 이 기간 신규아파트 분양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와 연계돼 집단대출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우리나라의 신규아파트 분양은 대체로 무주택자의 최초 주택소유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부채로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은 신규분양주택의 경우에도 피해갈 수 없는 속성이므로 신규분양시장의 과열 여부, 그리고 집단대출이 과열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지가 당시 논란의 주제였다. 집단대출은 DTI 규제가 배제되어 있는 등 건전성 규제에서 예외 취급을 받았는데, 이를 건전성 규제의 사각지대로 우려하는 지적이 집중됐다. 집단대출 증가세는 이후 신규아파트 분양이 점차 감소하면서 안정됐다. 결국 2017년 집단대출도 DTI 규제가 적용됐는데 적절한 제도보완이었다고 평가된다.

집단대출은 DTI 규제가
배제되어 있는 등
건전성 규제에서
예외 취급을 받았는데,
이를 건전성 규제의
사각지대로 우려하는
지적이 집중됐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 규제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최근 3기 가계부채의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주요 동인이었다. 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은 우리나라 특유의 대출항목이다. 그러므로 전세자금대출이 주도하는 가계부채 증가 현상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철저히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찾아내려는 자세가 요구되는데, 먼저 오랜 기간 주택임차시장을 지배해 온 전세제도라는 관행이 왜 갑자기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²⁾

전세자금대출은 가계신용통계의 분류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포괄되지만, 사실 주택담보대출과는 무관하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용도에 대해 제공되는 ‘보증서대출’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개의 공적보증기구와 서울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기관이다. 보증기관이 신용위험을 부담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가계대출 중 가장 저금리의 대출이다. 물론 전세자금대출 수요자는 보증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사실 보증제공은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자의 신용위험을 대신 부담하므로, 시장원리에 의한다면 보증기관은 전세대출자의 신용도를 심사해 보증제공 여부,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율을 책정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자금대출 제도에서 공적 보증기관은 신용심사를 하지 않으며 보증수수료율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 규제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2) 이하는 신인석·강현주, “한국 통화정책의 최근 기조평가 및 쟁점,” 『한국경제포럼』 정책세미나 (2021. 11. 12.) 발표자료를 참조함

결과적으로 은행은 보증서가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전세수요자도 가능하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유인이 크게 되어 있다. 대출수요자와 공급자의 태도가 이러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는 보증기관의 보증제공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늘리면 자동적으로 전세대출은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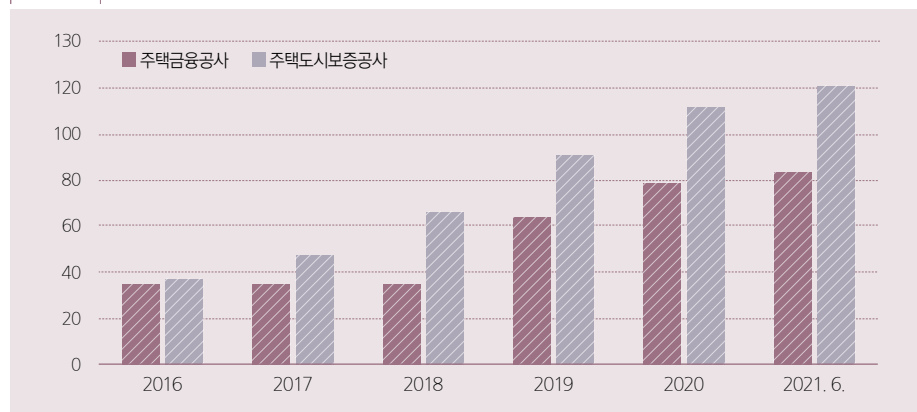
이런 구조 아래 2016년 무렵부터 지난 5년 공적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2015년 이전에는 공적 기관의 보증제공이 소규모였고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현재 가계신용의 분류체계에서 영통하계도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별도 항목으로 나누기에는 소액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으로는 현재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한 축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립 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것이 2016년이었던 점이 당시 전세대출 증가세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민금융의 일환으로 가계의 전세자금은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만연한 점이 근저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5년 전세대출은 급격히 증가하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동인이 됐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확한 공식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가계신용통계에서 전세자금대출은 별도로 정리되어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략적인 추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액을 살펴보면 2017년 47.5조원에서 2021년 6월 119.9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같은 기간 가계신용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40.6%에 해당한다. 이 수치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제공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전세대출의 비중은 이를 상회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민금융의 일환으로
가계의 전세자금은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만연한 점이 근저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2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잔액

(단위: 조원)



자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정책방향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체계의 정리다. 근자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 위험요인이라는 표현이 회자되지만, 그 언명의 엄중함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는 부실하다.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모두에서 언급한 대로 전세대출을 포함해 주택과 관련된 모든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하나의 항목에 섞여 있다.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이 각기 다른 수요공급 요인과 위험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세부 항목의 구분과 그에 따른 통계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정책설계의 출발은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정확한 사실 파악과 분석에서 시작돼야 한다. 즉시 시정되기를 소망한다.

둘째, 모든 항목의 가계대출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규제적용이다. 1기의 가계부채 증가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DTI 건전성 규제체계를 정비했다. 2기를 거치며 집단대출을 이 건전성 규제체계에 편입하는 성과가 있었다. 3기를 거치며 전세자금대출도 건전성 규제체계에 편입하는 성과를 거둔다면, 가계부채의 각 위험 증가기에서 얻어진 정책적 교훈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제도의 재정비다. 전세대출에 대한 적극적 보증을 장려하여 온 정책방향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보다 큰 경제정책의 목표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규모로 비대한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의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서민 주거안정이 역대 미국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임이 지적된 바 있다.³⁾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3) Rajan, Raghuram,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R&D

분야 예산

글

전승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조정전략센터장

2022년도 정부 R&D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4조원 (8.8%) 증액된 29.77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 중 4.9%로 편성됐다. 정부 R&D 총지출 추이는 <그림 1>과 같이 2016년 19.1조원 대비 2022년까지 10.7조원이 증액됐으며 2020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최근 년도의 정부 R&D 중점투자 항목은 ①2020년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 및 부품, 장비 자립화, ②2021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기술 및 생명 의료, 한국판 뉴딜 등 추진, ③2022년도 회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등이다. 2022년도 정부 R&D 예산은 기초원천기술 및 응용개발, 시설 장비 등 과학기술 주요 R&D 부문에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4.3조원(81.6%), 인문사회 R&D 및 보안성 국방 R&D, 정책 연구 등 일반 R&D 부문에 전년 대비 8.1% 증가한 5.5조원(18.4%)으로 편성됐다. 정부 R&D 유형별 주요 예산은 총 29.77조원 중 국방 R&D 4.8조원(13%), 일반 R&D 부문에서 대학지원 1.5조원, 인문사회 1.2조원, 국공립기관 0.6조원, 기획평가관리비 0.36조원 등이다. 주요 R&D 부문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3.4조원, 거

대 인프라조성 및 운영 1.5조원, 부처 지자체 R&D 0.9조원, 대학지원 인력양성 0.47조원 등으로 편성했다.

부처, 정책, 중점분야 등 다양한 사항 고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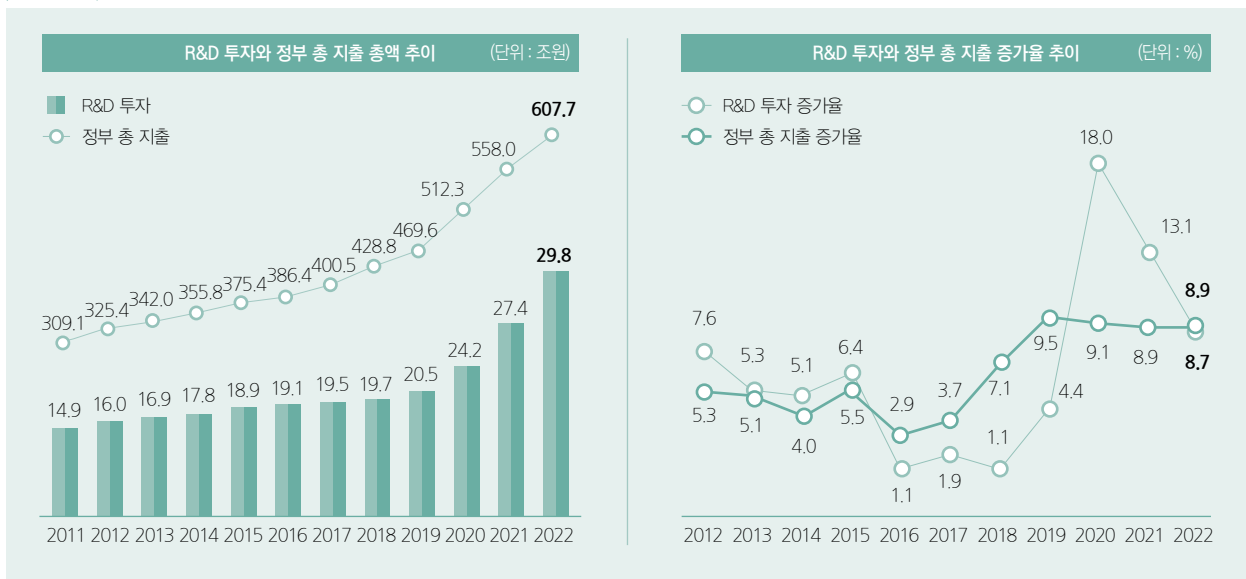
R&D 예산 책정

정부 R&D 예산은 36개 정부 조직이 참여한 다부처 편성체제로 부처 중심의 정책 부문별 R&D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구성된다.

부처별 R&D 예산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9.4조원, 산업통상자원부 5.5조원, 방위사업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 1.8조원 순이며 전체 총 R&D 예산의 80.7%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예산이 1조원 이상인 부처를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11.9%, 방위사업청 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 중소벤처기업부 6.4%, 교육부 3.8% 순으로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소재, 부품, 장비, 제조 등 기술 산업 경쟁력 제고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그림 1 정부 R&D 예산 총액 추이 및 지출 증가율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디지털 환경 핵심기술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분야에 사업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지역 거점기술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확충했으며, 교육부의 경우 미래기술 인력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의 인재 확보 사업을 확대했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해양경찰청 62.9%, 관세청 47.2%, 국방부 26.4%, 질병관리청 25.1%, 경찰청 20.2% 순이다.

정부 R&D 투자는 부처 중심의 자원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하향식 예산 전달체계를 갖는다. 또한 과학기술의 전략성 관점에서 부

처의 경제사회 목적별 상향식 R&D사업 예산요구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사전심의 및 배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부처 횡단형 검토체계를 갖는다. 2022년도 정부 R&D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정책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회복, 과학기술 선도, 포용적 혁신, 국방 부문으로 편성했다. 정책분야별 예산규모는 국방 4.92조원, 10대첨단전략기술 3조원, 혁신성장 BIG3(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2.74조원, 기초연구 2.55조원, 소재·부품·장비 2.32조원, 탄소중립 1.93조원, 디지털뉴딜 1.7조원, 지역 1.53조원, 감염병 대응 0.51조원, 청년·여성연구자 0.42조원 순이다.

표 1 2022년도 정부 R&D 부처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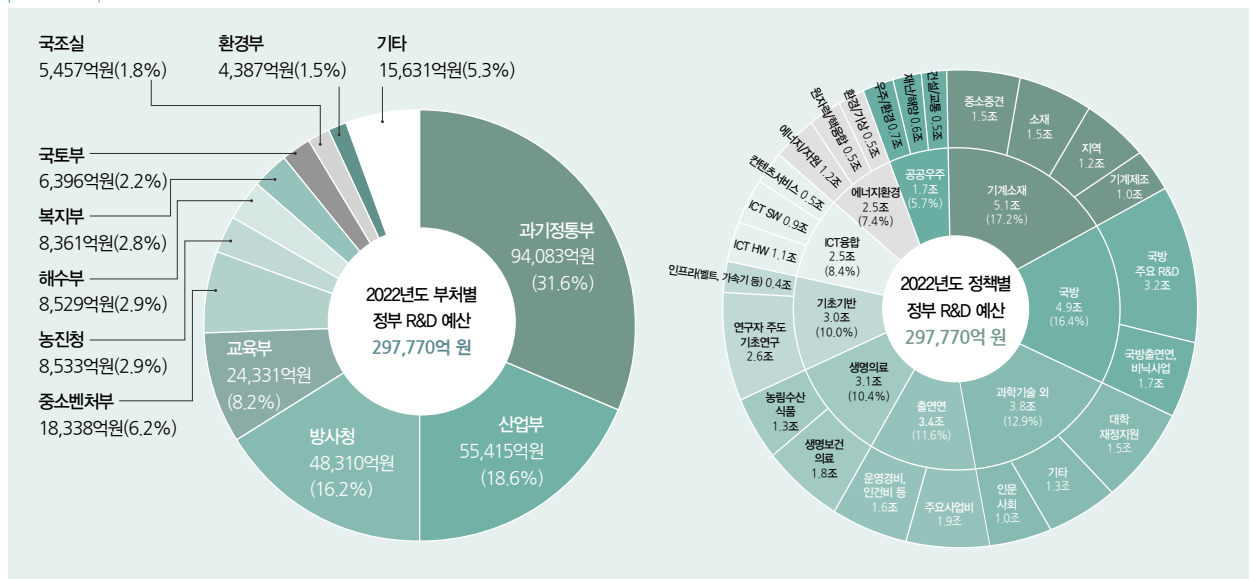
구분(I)	2022 예산	증가율	구분(II)	2022 예산	증가율
R&D총액	297,770	8.7	R&D총액	297,770	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4,083	7.7	국방부	702	26.4
산업통상자원부	55,415	11.9	문화재청	649	7.0
방위사업청	48,310	11.5	특허청	602	10.5
교육부	24,331	3.8	경찰청	592	20.2
중소벤처기업부	18,338	6.4	해양경찰청	428	62.9
해양수산부	8,529	9.0	소방청	233	11.7
농촌진흥청	8,533	6.4	관세청	44	47.2
보건복지부	8,361	4.1	개인정보보호위	30	-
국토교통부	6,396	6.1	법무부	27	8.0
국무조정실	5,457	3.2	기획재정부	26	△3.8
환경부	4,387	7.7	고용노동부	9	5.0
농림축산식품부	2,902	5.3	세관금청	9	25.7
산림청	1,645	10.2	인사혁신처	6	4.9
질병관리청	1,461	25.1	통일부	4	-
식품의약품안전처	1,340	13.0	공정거래위	4	-
문화체육관광부	1,323	16.1	행정복합도시건설청	4	5.1
기상청	1,236	6.4	여성가족부	3	5.0
행정안전부	1,200	15.8	외교부	2	△9.9
원자력안전위	1,149	0.5	법제처	1	5.7

표 2 2022년도 정부 R&D 부처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조원, %)

구분	정책 분야	2021 예산	2022 예산	증가율	주요내용
위기대응 경제회복	☑ 감염병 대응	0.44	0.51	15.3	☑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 혁신성장 BIG3	2.43	2.74	12.8	
	(바이오헬스)	1.76	1.88	6.8	☑ 신약개발, 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차)	0.39	0.47	21.5	☑ 친환경차, 완전자율주행(~2027)
	(시스템반도체)	0.29	0.40	37.0	☑ PIM AI 반도체, 인력양성 등
	☑ 디지털뉴딜	1.09	1.70	56.1	☑ AI, 빅데이터 등 전영역 디지털전환
	☑ 소재·부품·장비	2.15	2.32	7.7	☑ 핵심품목 및 미래선도 품목 개발
과학기술 선도국가	☑ 탄소중립	1.56	1.93	23.8	☑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혁신 등
	☑ 10대첨단전략기술	2.40	3.00	24.7	☑ AI, 우주, 양자, 첨단바이오 등
	☑ 기초연구	2.35	2.55	8.5	☑ 기초연구 2배 확대 국정과제 달성
포용적 혁신	☑ 지역	1.44	1.53	6.1	☑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청년·여성연구자	0.36	0.42	16.6	☑ 신진연구자의 안정적 연구기회 확보
국방	☑ 국방(산업포함)	4.41	4.92	11.6	☑ 민간기술협력, 미래도전 R&D 등

그림 2 정부 R&D 예산 총액 추이 및 지출 증가율 추이



예산 증가율은 디지털뉴딜 56.1%, 전략기술 24.7%, 탄소중립 23.8% 순으로 높다. 기술분야별 예산규모는 기계소재 5.1조원, 국방 4.9조원, 과학기술 외 3.8조원, 출연 연구기관 3.4조원, 생명의료 3.1조원, 기초기반 3조원, ICT융합 2.5조원, 에너지환경 2.2조원, 공공우주 1.7조원 순이다.

국가 전략기술 예산의 확대 추세

글로벌 경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대면 경제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 혁신역량 저하, 기후변화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UN)은 위험과 재난의 유형과 대상을 선진국을 포함해 건강, 고용, 일자리, 산업화, 혁신 등으로 확대(UNISDR¹⁾)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통찰과 대응을 권고한바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²⁾)에 대한 R&D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국의 정부 R&D 예산 및 민간기업 R&D 투자를 포함한 국가 R&D 예산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최근 5년간 7% 이상, 미국도 5%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낸다. 주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과 경제성장을 하락의 복합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및 신경제(Tech-nomics)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첨단기술 중심으로 확장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있다. 주요국 간 수출품목 규제 갈등이 커지면서 동맹국 간 국방 및 안보 분야의 기술동맹도 강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지정학과 같은 신기술 국제협력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주요국 간 수출품목 규제 갈등이 커지면서 동맹국 간

국방 및 안보 분야의 기술동맹도 강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지정학과 같은

신기술 국제협력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표 3 주요국 국내총연구개발비(GERD¹⁾) 규모 추이(OECD MST²⁾ 2021/PPP\$³⁾)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미국	연구개발투자	522,652	556,343	607,474	657,459
	GDP 대비 비중	2.79	2.85	2.95	3.07
중국	연구개발투자	235,936	260,494	297,431	320,532
	GDP 대비 비중	2.10	2.12	2.14	2.23
일본	연구개발투자	155,447	156,128	162,276	164,709
	GDP 대비 비중	3.11	3.17	3.22	3.20
독일	연구개발투자	102,027	112,464	123,609	123,171
	GDP 대비 비중	2.94	3.05	3.12	3.19
한국	연구개발투자	59,793	69,663	77,924	76,412
	GDP 대비 비중	3.99	4.29	4.52	4.64

주 1) 국내총연구개발(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esearch & Development) : 국가 간 R&D 활동 비교지표(OECD)

2)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21–September

3)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환산 수치로 OECD 통계에 활용

1) UN 산하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은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등의 개념과 재난위험경감 연계성 강조, 재난위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등 국제적 방향과 협력안을 제시함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 산하기구를 통해 글로벌 이슈 대응과 위험 극복을 위한 대안 목표를 제시함

표 4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R&D 투자 프로그램, OECD STI, 2021 재구성

	혁신역량 강화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개선
미	- 미국혁신전략(혁신기반투자, 민간 혁신활동촉진, 국민혁신성유인) - NIH 차세대연구자아인시티브(신진 중견 연구자지원) - NSF 10대 Big Ideas Project(미래 주도, AI·로봇·IoT·양자·데이터 등) -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연방기관)	- 국가인공지능R&D전략계획, 혁신도전 프로젝트(국방 DARPA) - 양자정보과학 네트워크 전략비전(과학 기술정책실 양자과학정책처) -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전략계획(첨단제조경쟁력과 기술역량강화), 네트워크 및 IT R&D 프로그램, 매뉴팩처링USA	- NIH 코로나19 연구전략계획 - 정밀의료추진계획, 대기 및 에너지 R&D실행계획 - NIH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지원,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Air&Energy연구(대기질, 대기오염, 실내공기 등)
에	-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기초 과학, 프론티어기술연구강화 등) -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2035(BT, IT, ET, NT, 에너지, 첨단기술 등) - 국가혁신주도 발전전략(산업, 원천, 지역, 민군융합, 주체, 인력 등) 13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 프로젝트	-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과제(선도, 원천, 혁신공간, 창업, 체제개혁 등) - 국가전략신용산업계획과제(혁신 전략, 시장, 핵심기술, 시스템 형성, 디지털, AI, 로봇, 신소재, 신에너지, 환경, 우주항공, 전략산업, 바이오, 저탄소, 글로벌 영향력 확대 등)	- 국무원 산하 응급관리부사업,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프로그램, 위생건강과학기술혁신특별계획, 건강위생개발계획 - 건강중국2030, 자연재해평가 플랫폼 건설, 방재 및 저감과학 기술, 국가종합방재감제계획 2020
EU	- EU연구위원회, 마리퀴리액션, 유럽 연구 인프라(도전혁신연구자지원, 인력양성, 인프라활용, 시민참여 등) - 민관 연구인프라전략포럼·컨소시엄 - 영국(박사양성, 지식이전파트너십, 시설장비(다이아몬드라이트) 등 - 독일(하이테크전략, 전문인력기반 등)	- 미래신용기술(바이오, 데이터, 시스템, 녹색, 나노, 신경, 양자, 로봇, 신소재) - 기반·산업기술 리더십구축(제조로봇, 첨단소재, 생명과학, 나노전자광, AI, 양자, 보안, 우주 등), 민관파트너십(PPP, 하향식 연구 등), 인더스트리4.0 플랫폼(가치사슬 디지털화)	- 보건 연구변화 및 복지, 안전·정정에너지(지속가능성, 질병·건강·의료, 탈탄소, 온난화 대응 등) - 호라이즌프로그램(보건의료, 연구협력, 보건산업, 파트너십, 생명과학블루스카이연구 등) - 에너지혁신프로그램(에너지안보 등)
일	- Society5.0 SIP 2기('18~'22, 전략적 혁신 프로그램, 연 약 500억엔 등) - 연구력·연구개발력강화(신진연구자도전, 원천, 경력, 인재육성 등) - 중점혁신분야기반기술(AI, 바이오, 양자, 소재, 응용기술)	- SIP 별도 민관협력·도전프로그램 추진 - PRISM(관민투자, AI·IoT·빅데이터 등) - ImPACT(도전혁신프로젝트, 뇌·핵·바이오·광·양자로봇 등) - MOONSHOT(파괴적 혁신과제, 달 탐사, 뇌, 질환, AI와 로봇 신기술 등)	- SIP2기(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등) - 공중위생위기 대응(진단·치료·백신, 기기 R&D 등) - 강인한 사회·경제구조구축(탈탄소사회 이행, 혁신 환경 이노베이션의 추진)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GDP 대비 4% 이상, 최근 5년간 7% 이상의 증가세이나 주요국과의 총 R&D 투자 규모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액 대비 주요국 투자액은 미국 8.6배, 중국 4.19배, 일본 2.16배, 독일 1.61배 규모다. 국가 R&D 투자 중 정부 R&D 예산 비중은 프랑스 35%, 영국 32%, 미국 29%, 독일 28%, 중국 20%, 한국 21%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으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의 무역 수지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와 같이 주요국의 정부 R&D 투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가의 혁신역량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적 파급력

이 높은 혁신 도전적 기술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양자, 로봇 등 디지털경제와 에너지, 바이오, 환경 등 그린경제의 선도를 위한 국가 전략기술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민관협력과 정부 예산 투자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 5위(OECD MSTI), 세계혁신지수 5위(UN WIPO)의 R&D 주요국으로 부상했다. 진정한 선진 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선도적 과학 기술 역량이 필수적이며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협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선도국가의 조건으로 초월적 문제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경제·사회적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책임을 재정립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적 선도형 R&D 시스템을 정비할 시점이다. 🌐

대전환 시대 재정의 역할

인구고령화의 도전과 사회정책적 대응

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복지지출

한국은 초유의 저출산을 겪고 있다. 2020년 합계출산율 0.84도 모자라, 2021년은 0.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45년 후인 2067년 한국의 총인구가 3,689만명으로 감소하고, 그로부터 50년 후인 2117년에는 1,510만명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임성빈, 2021).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지만, 평균수명은 증가한다. 노인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로부터 불과 8년만인 2026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통계청, 2019).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기에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2020년 21.8명에서 2070년에는 100.6명이 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노인성 복지지출의 증가를 가져온다. 예산 제약성을 감안할 때, 노인성 복지지출의 증가는 근로연령대 생산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의 위축을 의미한다. 거칠게 말하면 소비성 복지지출은 늘고, 투자성 복지지출은 잘 해야 제자리걸음이 될 확률이 크다. 복지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다행히 인구구조 변화는 예측가능한 위협이다. 그리고 한국 복지국가는 뒤늦게 성장한 관계로 아직 청소년기에 놓여 있다. 경로의존성 때문에 제도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청소년기라 교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갖고 있다.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앞서 인구고령화가 시작된 서구 복지국가

의 정책적 대응의 성패를 살펴볼 수 있다. 성공적 대응은 취하고, 실패는 반면교사로 삼자. 인구고령화의 도전에 선제적으로 응전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사회복지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서구의 경험: 스웨덴 vs. 이탈리아

서구 복지국가 중에 사회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스웨덴을 꼽을 수 있다. 스웨덴은 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05년 900만명을 넘어선 인구가 2017년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에는 1,03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1.8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아니었으면 인구증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1971년에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선 후, 약 50년 후인 2019년에서야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되었다(앞서 언급했지만, 한국은 8년 소요 예상).¹⁾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25.5%로 OECD 평균 20%에 비해 높은 편이나, 국가채무는 55.4%로 OECE 평균을 크게 밑돈다.

스웨덴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도전에 직면한 것은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1900년대 초다. 스웨덴의 출산율 하락은 매우 가팔랐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산율을 보면, 1880년 30.32였던 것이 1935년 14.1까지 떨어졌다.²⁾ 당시 스웨덴의 저출산 문제는 ‘종속 자살’로 불리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주의 부활, 피임용구 판매 금지, 독신자에 대한 특별세 부과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회민주당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목표로 한 가족정책과 고용률 증대 및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다.

1)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25637/sweden-elderly-share-of-the-total-population-by-age-group>(검색일: 2022. 1. 19.)

2)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37818/crude-birth-rate-sweden-1800-2020>(검색일: 2022. 1. 19.)

사민당 정부의 사회정책적 대응에는 진보적 성향의 사회학자인 알바 미르달(Alva Myrdal)과 훗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군나르 미르달(Gunnar Myrdal) 부부가 1934년에 출간한 저서 「인구문제에서의 위기」(*Kris i befolkningsfrågan*)가 큰 영향을 미쳤다.

미르달 부부는 당시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두 세대 후에는 인구 규모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네 세대가 지나면 1/4로 감소하게 될 것임을 지적했다.

저출산은 인구고령화를 낳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부양 비용을 동반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첫째, 아이 출산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일으키므로 출산과 양육 비용을 개별 가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둘째, 기혼여성이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인구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급속한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노동능력의 지속적 향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³⁾

1932년 집권해 이후 내리 44년간 스웨덴을 이끈 사민당 정부는 미르달 부부가 제시한 해법을 시행에 옮겼다.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그리고 공보육을 통한 양육비용의 사회화와 더불어, 가정 배경과 상관없는 아동 발달 기회 부여, 공교육과 공공훈련의 확대, 공공의료의 확충과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혼외출산 자녀와 법정혼 자녀의 동등한 혜택 부여 등이다. 1992년 에델(Ädel)개혁을 통해, 치료가 필요 없는 노인 간병은 병원이 아닌 지자체의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로 대체해, 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1999년에는 명목확정기여(NDC)방식의 연금개혁을 단행해, 수명이 늘어나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을 만들었다. 또 기초연

금은 폐지하는 대신 선별성이 강화된 기초보장연금을 도입해 기초보장 수준을 두 배로 올리면서도 재정을 크게 절감했다.⁴⁾

2017년 스웨덴의 공적의료지출은 GDP의 6.4%, 공적연금지출은 7.1%로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은 총 13.5% 정도다. 공공사회지출이 GDP의 25%를 넘는 나라 중에서 노르웨이와 함께 그 비율이 가장 낮다. 반면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현금급여(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아동수당) 그리고 공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12.6%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노인성 지출은 최대한 통제하고,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은 확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복지지출 구조를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다른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라는 동일한 도전에 대해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국가는 북유럽 국가와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성 지출이 과하게 높고,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투자지출은 적다. 2017년 이탈리아의 연금과 의료지출은 GDP의 22%를 넘어 전체 공공사회지출의 80%에 달한다. 사회 서비스와 가족정책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근로연령대에 대한 투자적 복지지출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는 여성고용율이 낮으면서도 합계출산율은 1.2에 머물고, 빈곤율, 소득불평등 등 다른 사회적 성과 또한 스웨덴보다 많이 뒤떨어진다.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만 이탈리아가 11.3%(2018년)로 스웨덴의 11.4%(2019년)에 비견되는 성과를 보인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공적연금에만 GDP의 15.6%를 쏟아부어 노인빈곤율을 낮출 때, 스웨덴은 GDP 대비 7.18%의 연금지출로 유사한 성과를 낸다.

3) 신정완, "1930년대 스웨덴 인구문제 논쟁에서 제시된 미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이론적, 철학적 기초,"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9호, 2017, 51~96쪽.

4) 이현(2021), "스웨덴 사례연구," 양재진 외,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 경제」, 국민경제자문회 연구보고서(12-1790049-000049-01), 스웨덴의 NDC연금제도와 기초보장연금에 대해서는 양재진의 "스웨덴 연금제도의 이해와 쟁점 분석" (사회과학논집, 2011년 제42권 1호) 참조

앞서 언급한 재정효율성을 목표로 한 1999년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낳은 결과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GDP의 150%를 넘는 국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랜 기간 저성장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을 비교해 볼 때, 사회투자형(social investment)으로 명명할 수 있는 스웨덴의 복지지출 구조가 인구고령화 시대에 한국이 염두에 두어야 할 복지 정책의 방향타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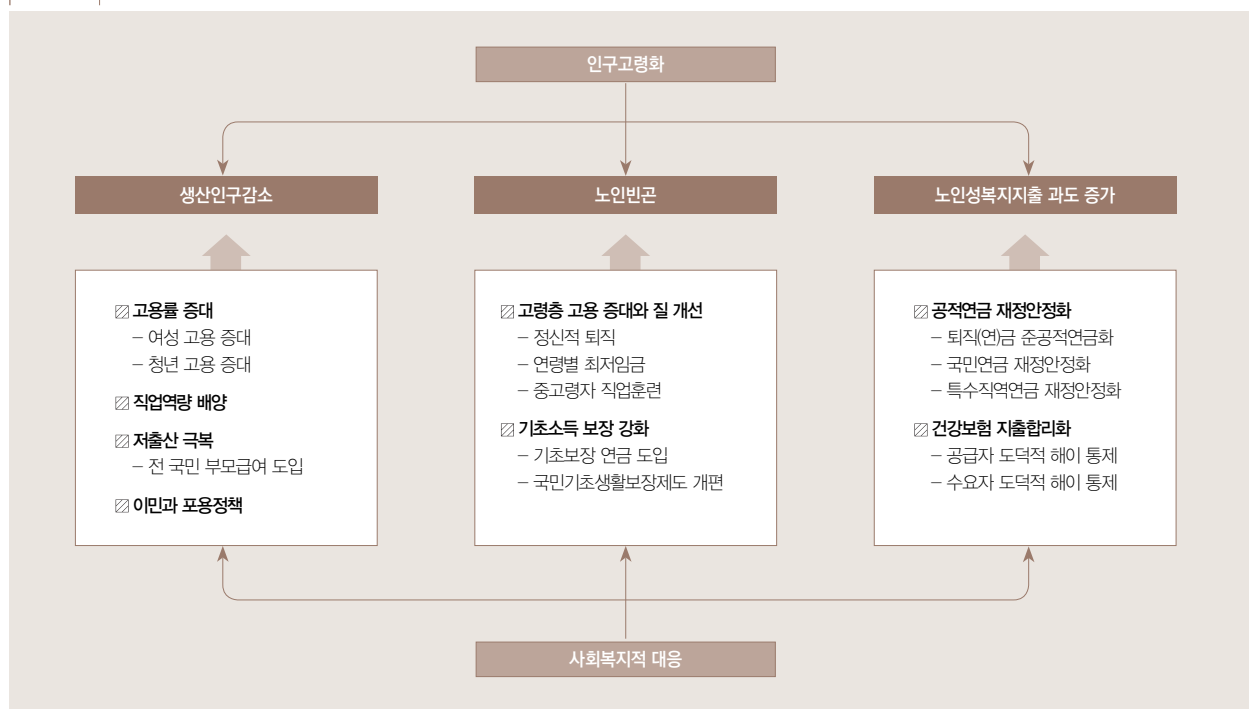
한국 사회정책의 재구조화 방향

많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공히 우리나라보다 한두 세대 앞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어떻게 사회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경제사회적 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도 이탈리아가 아닌 스웨덴이 걸어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 목표는 ①노인성 복지지출의 과도한 증가를 통제해 생산

인구에 대한 투자적 복지지출을 가능하게 할 것, ②고령 인구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효율화와 소득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빈곤의 방지, ③여성과 청년의 고용율과 인적자원의 질 제고를 통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상쇄돼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성 복지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그 증가율을 완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 2018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의 개혁안(나안)대로 적어도 3~4%p 정도의 보험료 인상과 연금개시연령의 단계적 인상 그리고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급여조정이 이루어지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중 보험료 인상은 빠를수록 좋다. 현재 매년 60조원 내지 70조원 가량의 연기금 투자수익이 쌓이고 있다.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이 불어나면 투자 수익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조치도 동반돼야 한다.

그림 1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방향



연금에만 의존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정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연령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
 중고령자 전직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연령별 최저임금을 도입해
 중고령자 고용 저해 요인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해 연금액이 하향조정되고 연금
 개시연령이 뒤로 늦춰질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퇴
 직연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퇴직(연)금의 정상화에
 추가적인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퇴직연금으
 로 전환하지 않고 퇴직금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이 많다.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은퇴근로자들이 연금
 (annuity)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연금이기보다는 사외적립식 퇴직금처럼 활용되는 것이
 다. 납입원금의 50% 정도는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나머
 지는 모두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퇴직연
 금이 의무화되는 만큼, 수수료 인하와 수익률 제고 조치
 도 필요하다.

연금 못지않게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도 긴요하다.
 공급자인 의사와 병원의 진료를 과잉 유발하는 지불방
 식인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로 전환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필수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급여와 혼합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올려 급여항목으
 로만 치료하도록 유인하는 개혁도 필요하다. 수요자인
 국민의 과다한 의료 서비스 구매 행태도 유럽 복지국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료저축계정
 을 도입해 경증은 자기 개인계정에서 진료비를 지불하
 고, 중증에는 현행 사회보험방식을 유지하는 개혁도 고
 민해야 한다.

둘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통해 노
 인성 복지의 과다 지출을 막고, 국가재정 투입 없이 퇴
 직연금의 정상화를 통해 은퇴자들의 노후소득원을 추
 가하게 된다면, 국가는 보다 많은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
 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쓸 수 있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다른 OECD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기이한 구조다. 소득
 이나 필요 수준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
 의 70%까지 거의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빈
 곤선 이상의 노인들에게까지 국가재정으로 연금을 주
 다 보니, 연금액이 높기 어렵다. 덕분에 약 40%의 노인
 들이 기초연금을 받고도 빈곤선 이하에 머물고 있다.

스웨덴을 위시한 대부분의 나라는 보편주의적 기초 연금이 아닌 선별주의적인 기초보장연금 혹은 보충연금을 통해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 두툼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처럼 기초보장연금을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 운영해 노후소득보장의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에만 의존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정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연령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 중고령자 전직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연령별 최저임금을 도입해 중고령자 고용 저해 요인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여성과 청년의 고용율을 끌어 올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여성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정책이 다각도로 전개되어야 한다. 출산 후 1년 동안의 육아휴직, 이후는 질 높은 공보육과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습 강화가 중심이 돼야 한다. 청년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해 보다 빠른 속도로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스마트 공장화와 노동조건 개선도 유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는 저임금 일자리 2개를 괜찮은 일자리 1개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 공급측면에서 직업훈련 강화와 훈련수당의 충분한 인상, 청년고용보장제를 통한 일자리 경험 제공 등도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공보육과 소득보장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한국의 공보육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북유럽 수준의 취원율을 자랑한다. 그러나 소득보장은 매우 열악하다.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로 휴직이나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과 마찬가지로 상태가 된다. 더군다나 양육비가 추가로 들어 소득상실에 대한 위험이 보통의 실업보다 매우 크다. 따라

서 출산에 따른 소득상실과 지출증가라는 이중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의 낮은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50%, 상한액 120만원)을 소득대체율 60%에 최대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곧바로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일반재정에서 모든 부모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씩의 부모급여를 1년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보험 방식의 스웨덴도 자영업자와 학생 등에게는 일반재정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아예 일반재정에서 모든 부모에게 소득비례형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출산율이 2003년 1.3명까지 하락했다가 전 국민 부모수당 도입 후 2019년 출산율이 1.6명까지 반등했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두 바퀴가 함께 작동해야 출산이 정상화된다.

여성과 청년 고용이 늘고,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외국인 노동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할 것이다. 저임금 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동반과 가족 형성이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민 1세대는 피부책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달라도 근로의욕과 성실성이 높기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세와 3세들에 대한 강력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며, 핵심은 적극적 기회의 평등제고다. 포용적 공보육, 낙오자 없는 공교육, 대학입학의 정원 할당, 직업능력의 함양과 차별금지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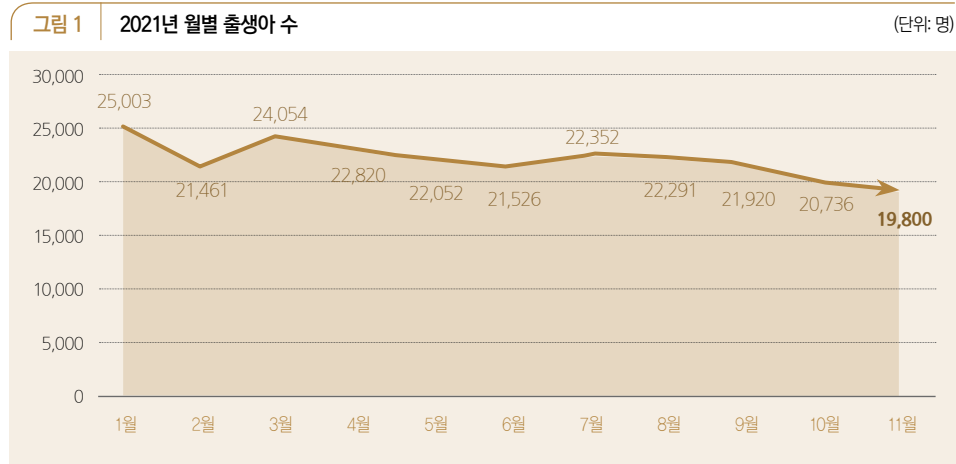
한국은 초유의 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가능한 위험이며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경험한 도전이다. 응전의 데이터와 결과를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해법을 알고 있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실천이 쉽지는 않겠으나, 공생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이다. 🌐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통계 소개

글 김선영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출생아 수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 9,800명으로 집계됐다. 즉, 2021년 11월까지 태어난 누적 출생아는 24만 4,016명으로 현재의 추이라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출생아 수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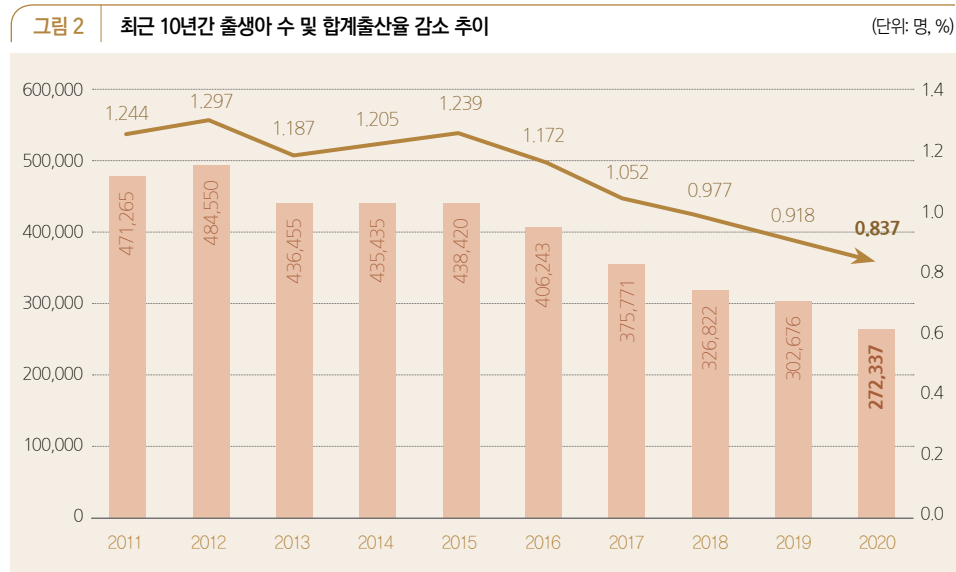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인구동향조사

최근 10년간 연간 출생아 수를 보면, 뚜렷한 하향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약 47만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2020년에는 27만명으로 10년간 40% 이상 급감했다. 2021년에는 25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8년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서비스를 개시해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ABOSTATS는 670여 종의 재정·경제분야 통계를 총망라해 제공하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300여 종의 상임위원회별 정책통계는 물론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NABOSTATS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계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NABOSTATS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합계출산율¹⁾ 역시 2011년 1.244%에서 2020년 0.837%까지 감소하며, 출생아 수 추이와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가 가임여성인구 감소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출생아 수의 감소는 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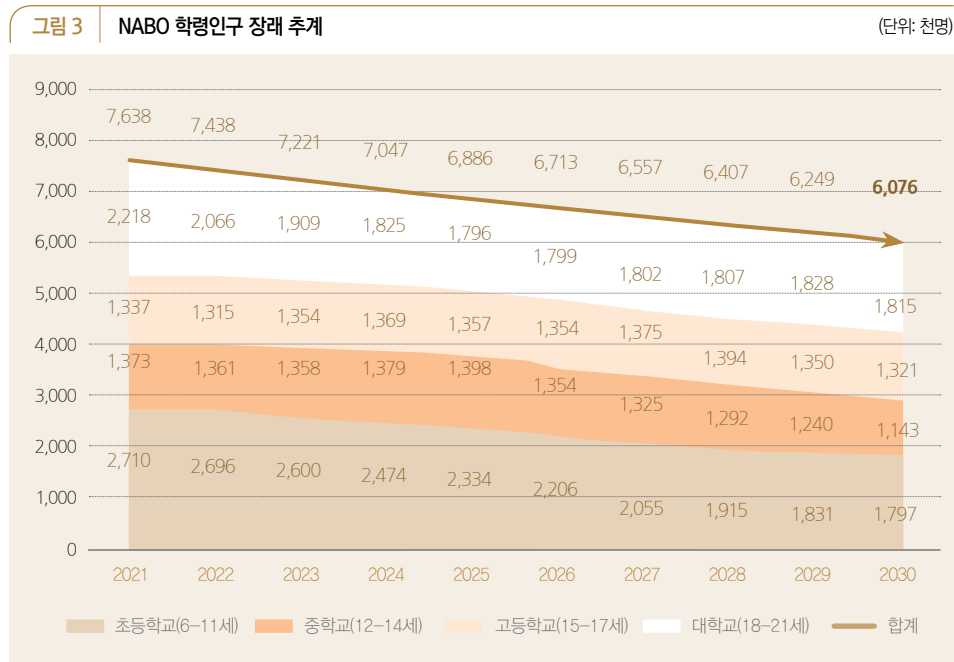


자료 NABOSTATS-인구·사회통계-인구·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NABO STATS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NABO의 학령인구 장래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2021년 271만명에서 2030년 179만 7천명으로, 중학교는 137만 3천명에서 114만 3천명으로, 고등학교는 133만 7천명에서 132만 1천명으로, 대학교는 221만 8천명에서 181만 5천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총 학령인구가 10년 만에 16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자료 NABOSTATS-인구·사회통계-인구-장래추계-학령인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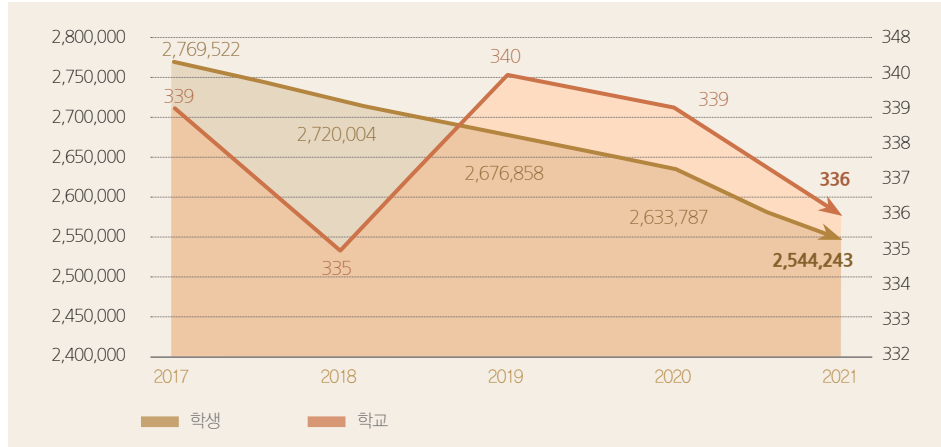
학령인구 감소는 결국 교육기관의 폐교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대학의 위기가 크게 조명받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구분하는 인식의 심화로 비수도권대학의 경우 더욱 큰 위기를 겪고 있다. 2040년경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의 입학 정원만으로 대학진학 수요가 충족되므로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입학 지원자가 없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실제 대학생 수를 보면 2017년 약 277만명에서 2021년엔 약 254만명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5년 만에 10% 이상의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이다. 동일 기간 대학교 수는 339

개 교에서 336개 교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최근 5년간 대학생 및 학교 수 현황

(단위: 명, %)



자료 NABOSTATS-위원회별 통계-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 학생·교원·학교 현황

이에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미충원에 대비하기 위해, 각 대학에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1,400억원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한 1조 2,00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다. 대학의 위기, 특히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대학의 폐교는 지역 상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지역 경제에 지대한 타격을 주는 것을 여러 지방대학의 폐교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대학 폐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NABOSTATS 두 배로 활용하기

NABOSTATS는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학령인구 장기 추계, 학생·교원·학교 현황 등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기구와의 통계 데이터 연동 등을 추진해 더욱 신속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재정·경제전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와 통계를 함께 이용하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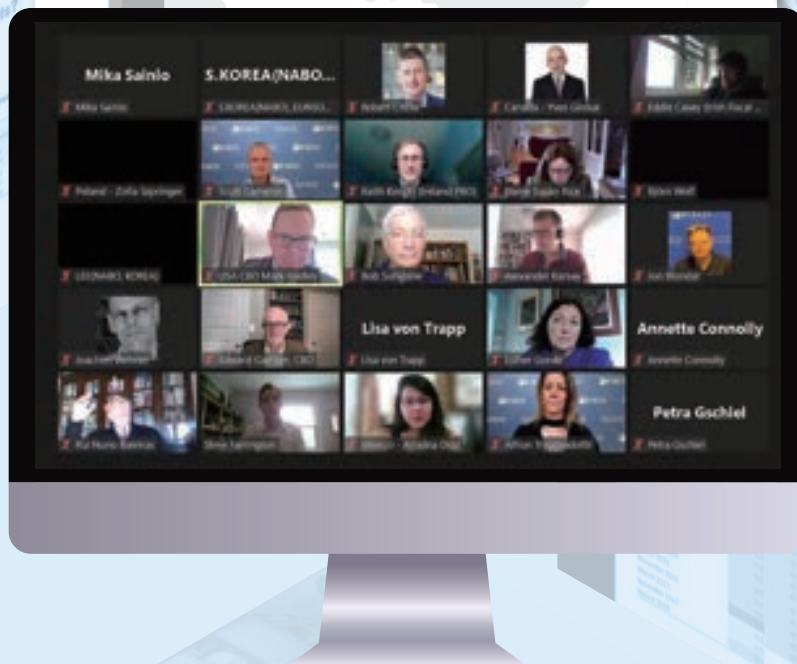
국제회의 리포트

OECD 독립재정기구 화상회의

클

오은선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2담당



OECD는 각국 독립재정기구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재정·경제 현안을 논의하여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공공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OECD 가입국의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009년부터 매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아일랜드, 핀란드, 라트비아 독립재정기구 OECD의 평가보고서

들어가며

지난 2021년 11월 5일(금) 제13회 OECD 독립재정기구 (IFI: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회의가 22시 30분(한국시간 기준)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ZOOM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 OECD는 각국 독립재정기구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재정·경제 현안을 논의하여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공공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OECD 가입국의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009년부터 매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회의가 화상으로 전환된 데 이어, 당초 아이슬란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회의 역시 화상으로 개최됐다.

주최 측인 OECD에서는 OECD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인 Mark Hadley(미국 의회예산처(CBO) 최고 운영책임관)와 Jon Blondal(예산·공공지출국장), Scott Cameron(정책분석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멕시코, 일본 등 각국의 독립재정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약 130명이 참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과 오은선 기획예산2담당, 오지현 대외협력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개요

이날 회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OECD에서 아일랜드, 핀란드, 라트비아의 독립재정기구를 평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어서 제2세션에서는 독립재정기구의 거시경제 전망 정확도 향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세션

OECD 독립재정기구 보고서의 시사점 논의 – 아일랜드, 핀란드, 라트비아를 중심으로

제1세션은 먼저 OECD 정책분석관인 Scott Cameron이 아일랜드, 핀란드, 라트비아 독립재정기구에 관한 OECD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해당 독립재정기구들은 비교적 최근(2010년대)에 설립됐으며 소규모(상근인력 약 2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Scott Cameron은 이와 같은 소규모 독립재정기구의 경우 자체 지원 서비스(in-house support services)의 실용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당 기관들의 방식을 공유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현안에 대한 working paper 발간, 컨퍼런스 개최, 전망 기법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새로운 사회 현안에 대한 비공식 정책 토론의 장(블로그 플랫폼 등)을 조성하는 시도를 했다. 또한 라트비아는 내각 논의에서의 발언 기회 증대, 의회 위원회 운영에 대한 참여, 임원 등의 언론 참여 등을 통해 재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Scott Cameron의 발표에 이어 아일랜드, 핀란드, 라트비아의 독립재정기구 담당자들이 OECD의 평가 보고서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했다.

아일랜드는 기관이 재정현안을 논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지속가능성 보고서(Long-term Sustainability Report)'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핀란드에 대해서는 기관의 독립적인 분석력을 향상시킬 필요성, 대내외적으로 기관 정체성을 가시화하고 기타 재정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소통을 제고할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라트비아의 경우 대중매체 출연으로 인한 긍정적

이고 대중적인 이미지, 높은 정보 접근성 등에 강점이 있으나, 재정적 인센티브가 취약하고 직원의 이직률이 높으며 재정부처 및 기타 재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이와 같은 사례와 시사점 공유에 이어, 독립재정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개선 과제에 대한 각국 담당자들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각국의 독립재정기구들이 기관 정체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

제2세션

IFI의 거시경제 전망 정확도 향상에 대한 논의

다음으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먼저 OECD 정책분석관 Scott Cameron이 각국 독립재정기구의 거시경제 전망 현황과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어 미국 CBO 거시경제분석관인 Edward Gamber가 CBO 경제 전망의 주요 변수 등 전망방식과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약 50%의 독립재정기구는 자체 전망(in-house forecasting)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약 88%의 독립재정기구는 정부 등에 의해 수행되는 공식 전망(official forecasting)의 성과를 평가하고, 약 47%는 이러한 공식 전망의 오류를 상세히 평가한 사후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약 65%의 독립재정기구는 자체 전망의 성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반면, 많은 수의 독립재정기구는 전망 및 전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책과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변동된다는 점, 전망에 필요한 일부 고려 변수들의 경우 외인성(exogeneity)이 강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전망에서는 거시 계열(macro series)을 세금 기반(tax bases) 혹은 지출 동인(spending drivers)으로 전환하거나, 국가 회계(national accounting) 개념을 예산 회계(budget accounting)로 전환하는 것 등에서 애로가 있었다.

다음으로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CBO의 경제 전망을 위한 주요 거시경제 변수로는 생산량 증가(output growth), 실업률, 인플레이션, 이자율, 임금 등이 있다.

CBO는 경제 전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평균 오차(mean error),¹⁾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²⁾ 등을 활용하고 있다. CBO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CBO, 행정부, 블루칩(Blue Chip) 컨센

향후 OECD 독립재정기구 간 기후변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아젠다를 반영한 예산편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 독립재정기구의 공동노력 증대 등을 위해 활동할 계획을 밝혔다.

서스의 전망은 시간 경과에 따라 유사한 오류 패턴을 보이나, 평균 제곱근 오차 측정에 따르면 CBO의 전망이 행정부 또는 블루칩 컨센서스보다 약간 더 정확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같은 발표 후 OECD 및 회의 참여자들의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독립재정기구의 거시경제 전망과 관련한 시사점으로는 정확성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책 모델의 성과를 평가할 것,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벤치마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의 중요성, 재정 예측 오류를 직접적이고 세세하게 평가할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마치며

OECD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대부분의 독립재정기구에서 IFI 원칙(Principles for IFIs)³⁾이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이행됐으나,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향후 OECD 독립재정기구 간 기후변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아젠다를 반영한 예산편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 독립재정기구의 공동노력 증대 등을 위해 활동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제14회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22년 5월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2023년 회의는 아이슬란드에서 열릴 예정임을 알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 전망 등 주요 활동과 관련된 역량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두되는 주요 재정현안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1) 중심성(centeredness)에 대한 CBO의 기본 척도로, 시간 경과에 따라 평균 예측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냄

2) CBO의 주요 정확도 척도이면서 예측 값이 실제 결과와 대비하여 분산되는 정도를 보여줌

3) OECD는 효과적이며 유익미한 독립재정기구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IFI 원칙을 작성 및 권고하고 있음. IFI 원칙은 독립성과 비정파성(임원의 임기해임기준 등의 법령 규정 포함), 임무의 명확성 및 자율성, 정보 접근성, 투명성 등을 포함함

NABO

발간보고서 소개



NABO 분석보고서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2021년 12월 10일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년 12월 24일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2021년 12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국 중심으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2021년 12월 29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자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 분석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2021년 12월 30일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코로나19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2021년 12월 30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2022년 2월 4일

NABO 정기간행물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 3, 제18호)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2021년 12월 21일
NABO 추계 & 세제 이슈 (2021년 Vol. 4, 제17호)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년 11월 29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3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2021년 11월 29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4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2021년 12월 29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5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2022년 1월 27일

발간된 보고서는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환경 하에서 정확한 경제상황 파악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GDP는 향후 경제동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이나 매 분기 종료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표되고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월별자료를 이용해 분기 GDP 성장률을 미리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경제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월별자료를 이용해 분기자료를 추정하는 주성분 분석 및 동태요인 분석 모형을 기본으로 설정해 분기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했다. 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로 설정했으며, 변동성이 높은 2020년을 포함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해 코로나19가 예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 분석결과 월별자료를 이용해 GDP를 예측한 주성분 분석과 동태요인 분석 모형이 분기자료를 이용해 GDP를 예측한 벤치마크 모형인 AR 모형에 비해 예측오차가 작아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기 GDP 예측모형을 구축해 실질적 발표 전에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을 생성함으로써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년 국회 세법심사는 240건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총 7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17건의 법률안이 성안됐고, 12월 2일과 9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보고서는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정리해 2022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수반하는 세수효과를 추정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봤다.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본 보고서는 한 해 동안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를 유발하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와 예산반영 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가결된 법률 1,039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302건이며, 수입의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62건,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25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한 139건의 법률은 제외하고 163건의 법률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실제 예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재정수반법률의 수입과 지출 부문으로 구분해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수입 관련 27건의 법률안(재정수반 요인 142개)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3,150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가의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1조 8,825억원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동기간 연평균 5,674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지출관련 138건의 법률안(재정수반 요인 195개)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4,144억원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가의 지출은 5년 동안 연평균 5조 6,503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동기간 연평균 7,642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의무지출은 5년 동안 연평균 3조 3,544억원, 재량지출은 연평균 3조 6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재정수반법률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9건의 법률이 수입과 지출 관련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법률의 예산반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건의 수입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2021년도 국세수입은 4조 7,198억원 감소하고, 국세외수입은 1조 2,500억원 증가했다.

지출 법률 예산반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90건의 지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31개 부처 세부사업예산에 2020년 2조 5,222억원, 2021년 4조 1,335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액의 3.2%(2020년), 8.2%(2021년) 수준이다.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재정수반법률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사업비 투입이 전제되므로, 제·개정된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관련 사업이 적시에 계획되고, 사업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재정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국 중심으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수준과 경제성장 경로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대응방향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에 대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했다.

1990년대까지는 OECD 국가의 인구와 경제가 동반 성장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별, 지역별로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의 경우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나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국가별 노동생산성 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60~2019년까지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핵심 노동 연령대인 30~64세 인구 비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p 상승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 하락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8%p 상승해 총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2000년 이전 시기에는 0.47~0.54%p에 달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0.19~0.25%p에 그쳐 OECD 국가들의 고령화 대응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OECD 국가들은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생산성 제고, 노동참여율 제고 등의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이주민(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주민 정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생산 및 서비스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생산성 하락을 통제하고자 했으며, 자동화 과정에서 부문 간, 연령별 균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가족정책, 양성평등 노동정책 등의 추진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층의 노동 참여 증대를 위해 정년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 분석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소요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영향은 재원조달에 따른 비용과 세대 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의 수혜와 재원조달의 부담이 세대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 중 연령별 이전지출의 확대가 중장기 경제성장과 세대 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이전지출 확대에 의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의 상환시점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를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현 세대는 효용이 증가하지만, 미래 세대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부정적 효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세대 내에서도 정부지출의 수혜가 높은 노년층과 유년층의 효용이 노동 연령층의 효용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나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및 세대 내에 차별화된 영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이 합계출산을 상승으로 이어져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효용감소는 상쇄될 수 있으며, 현 세대를 위한 이전지출이 미래 세대의 효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미래 세대에 비용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세대 간 효용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코로나19와 유동성 팽창 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세계경제는 각국의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 세계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코로나19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2021년 들어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나타났으며, 2021년 상반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실업률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선진국일수록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 간 코로나19 대응 격차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일부 신흥국에서는 금융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정부는 지난 1월 24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1월에 제출된 것은 1951년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추경안의 조기 제출은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4조원 규모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로 ①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②방역 상황 지속에 따른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보,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비한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원, ③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추가 확보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11.3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7조원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75.7조원으로 GDP 대비 50.1%에 이르고,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해 14조원만큼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총량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재원 및 재정건전성 등을 분석했고, 정책별 분석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사업 재원의 충분성,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등을 심층 분석했다.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 3, 제18호)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I. 주요 재정지표

2021년 1~9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86.0%, 78.0%다. 2021년 9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29.6조원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50.8조원 개선됐으며, 2021년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926.6조원)는 2020회계연도 결산 대비 107.4조원 증가했다.

II. 주요 재정동향

주요 재정동향으로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심사 결과',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수립',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2022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결정',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발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미국 인프라 투자법의 주요내용', 'OECD 국가의 교육재정 지표',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발표', 'OECD 주요국 건설 투자동향 비교'를 선정해 주제별 재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III. 주요 재정이슈

주요 재정이슈로는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발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을 선정해 재정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NABO

추계 & 세제 이슈

(2021년 Vol. 4, 제17호)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I. 추계&세제 트렌드

2021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2021년 3분기에 가결된 155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62건 (40.0%)이고, 추계가 가능한 20건에 대해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918억원의 수입 감소와 6,02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2021년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1년 3분기 누적 총수입 실적은 442.4조원으로, 전년동기(354.4조원) 대비 88.0조원(24.8%)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회복세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금의 자산운용 수익이 증가한 것 등에 주로 기인한다.

II. 추계&세제 분석

2022년도 총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총수입 전망은 552.1조원으로 2021년 전망 대비 25.7조원(4.9%) 증가하고 예산안보다 3.2조원(0.6%)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를 중심으로 340.9조원으로 전망됐으며, 국세외수입은 기금운용 수익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에 따라 211.1조원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2021~2025년)간 정부 전망 대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5.7조원 낮게 나타나며, 국세외수입은 20.5조원 높게 전망된다.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마련과 투자와 소비 촉진,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5년 누적 세수효과는 5.8조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7.2조원 보다 1.4조원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누적 세부담 귀착은 서민과 중산층 △1.7조원, 중소기업 △0.6조원, 고소득자 △0.1조원, 대기업 △3.3조원 등이다. 세제지원의 목적 및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및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48.8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514.6조원 대비 34.2조원(6.7%) 증가한 규모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

영해 338.6조원으로,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전망 등을 반영해 210.2조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입 기반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재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총수입 예산안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Ⅲ. 추계&세제 최근 이슈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시기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용이한 만성질환, 호흡기질환, 집단감염이 발생한(상급)종합병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중기 재정 전망 소개: 호주 호주연방 재무부의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는 2020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의 경제·재정 여건을 전망했다. 경제전망(FY2020~FY2022)에서는 경제적 지원 정책의 적극 시행으로 전망 기간 동안 경제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전망(FY2020~FY2024)에서는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 모두 FY2022년부터 증가할 전망이고,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캐나다 1927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캐나다는 보충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급여의 단계적 인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캐나다는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했으며, 향후 75년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국세 실적, 세외수입 실적,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3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I. 경제·산업 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부진하나,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상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 9월 서비스업 생산은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늘어 전월 대비 1.3% 증가했으며, 소매 판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외부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10월 수출은 해외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24.0% 증가하며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월 전체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5.2만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전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2% 상승하여 9년 8개월 만에 3.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금리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으며, KOSPI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10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전월세 가격지수 변동률은 소폭 상승했다.

II. 경제·산업 현안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동향과 시사점

최근 들어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신흥개도국에서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향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면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교역 동향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2019년 이후 정부는 소부장 관련 품목들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일본,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소부장 수입 비중은 하락했다. 반면, 전자부품에 대한 대일 수입 비중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요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해 국내 소부장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주요국 전기요금 동향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한 200여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폭 제한과 함께 석탄발전 감축에 합의했고, 이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서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가스발전 비중을 늘린 EU와 유럽의 경우 전기요금은 연평균 1.2~1.8%씩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요금수준의 변화도 주요국 대비 작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대응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탄소 전원 확대를 반영한 중장기 전기요금 로드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경제·산업 이슈

기업 간 비용 격차가 당기순이익 분포에 미치는 영향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등장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동의 확산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따라 기업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능력, 매출액성장률,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등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의 격차도 벌어지며, 다시 수익성과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초래되면서 종사자의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소수의 기업에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되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분석은 기업 간 시장경쟁력의 차이로 유발되는 매출액 격차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분석을 확장해, 기업의 당기순이익 격차의 심화 현상에도 주목했다. 또한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비용측면에서의 기업의 격차를 고려해 기업의 당기순이익 격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이익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격차를 완화해주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4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I. 경제·산업 동향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매 판매는 외부활동 확대 등으로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수출은 세계 수입수요 확대로 월간 600억달러를 최초로 초과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10월 생산과 설비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월 대비 각각 1.9%와 5.4% 감소했고, 11월 고용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며 전월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됐다.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11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금리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KOSPI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 가격지수 변동률은 전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II. 경제·산업 현안

2021년 3/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가계소득은 3/4분기 중 고용상황 개선,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세 지속, 재난지원금 및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서비스업 업황도 개선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증가했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석 명절 효과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가계의 총지출을 구성하는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은 전년동분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동분기 대비 감소하며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3/4분기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자금시장과 실물경제변수 동향의 관계

최근 국내 자금시장은 국내외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물

가위험의 경우에는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자금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자금공급 비중을 높이고 있다. 자금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함께 기술기반업종의 창업기업 증가, 소재·장비 분야 경쟁력 개선 등 한국 제조업의 저변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인구 감소 현황과 시사점

최근 들어 비수도권의 인구 규모와 총인구 대비 비중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비수도권 지방의 전반적인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①인구 자연감소와 ②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출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층(20~34세)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방인구 감소와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인구 유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방인구 감소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민간부문 부채 변화 국제 비교

미 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글로벌 시중 금리가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요국 민간부문의 부채 변화를 점검했다. 선진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확산 전후 고점 기준으로 높게 상승한 국가는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며 신흥국 중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멕시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중 코로나19 확산 전후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흥국에서는 중국, 러시아, 페루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부채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경제·산업 이슈

기업 간 비용 격차가 당기순이익 분포에 미치는 영향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등장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따라 기업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능력, 매출액성장률,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등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 또는 연구개발투자의 격차도 벌어지고, 다시 수익성과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초래되면서 종사자의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소수의 기업에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되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분석은 기업 간 시장경쟁력의 차이로 유발되는 매출액 격차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분석을 확장해, 기업의 당기순이익 격차의 심화 현상에도 주목했다. 또한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비용 측면에서의 기업의 격차를 고려해 기업의 당기순이익 격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이익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격차를 완화해주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5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I. 경제·산업 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고용여건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12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8.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가운데 12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77.3만명 증가해 전월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됐다. 또한 11월 중 산업생산도 단계적 일상회복과 일부 업종의 부품수급 차질이 완화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12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 소비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며 경기하강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부문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12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경기둔화 우려의 증대로 국고채 금리가 하락했으나, KOSPI지수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다.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II. 경제·산업 현안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한국경제는 1970년 이후 50년 동안 네 차례의 역성장 시기(2차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를 경험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은 이전 역성장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현 시점의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이전 경제위기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국내총생산과 정부소비지출 사이 상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던 결과로 볼 수 있다. 2022년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정·통화·금융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다. 총수요-총공급 균형 관점에서, 총수요의 정상화 속도에 맞추어 총공급의 원활한 증가를 지원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경제 정상화의 동시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세계 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2022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팬데믹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이 높아지며 회복세를 지속하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백신 보급과 접종률 차이, 경제정책 지원 규모, 각국의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불균등한 회복이 예상된다. 한편 세계 경제는 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 백신의 불균형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반복된 출현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 차질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경제의 경기가 둔화되면 아시아 주변국과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글로벌가치사슬을 교란시키며 세계 교역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분쟁은 특히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무역구조 개선, 지속적 신시장 개발과 다지역무역협정 참여의 방법을 통해 대외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역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장래 인구변화를 반영한 노동 공급 규모 전망

본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 공급 규모를 전망했다. 2021년의 노동 공급 패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30년의 취업자 수는 2021년의 98.4%, 총 노동시간은 97.2%가 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10년간은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50년의 취업자 수와 총 노동시간은 각각 2021년의 80.5%와 76.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치는 2017년 수행된 선행연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가 기존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고령층 노동 참여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면 충격의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추정된 노동 공급 규모 예측치는 정책적으로 유용한 기준추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

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정된 미래가 아닌 하나의 실현 가능한 상황 정도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다.

III. 경제·산업 이슈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의 높은 수입자본재 의존도, 수출주도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환율하락(원화가치 절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 환율하락은 수입자본재 가격을 하락시켜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감소로 신규 설비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 또한 존재한다. 환율변수로 실질실효환율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실질실효환율 상승충격(원화가치 절상)은 설비투자를 감소시키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약 8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 미국 금리인상 지연 등이 향후 원화환율을 하락(원화가치 절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환율 변동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제10권 제4호
발간일: 2021년 12월 29일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NABO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며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nabo.jams.or.kr)을 통해 논문을 상시 공모하고 있다.

※ 본문은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4호에 수록된 논문초록으로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기능별 재정 정책의 효과

제1저자 —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교신저자 — 이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본 연구는 기능별로 분류한 각 항목별 재정지출 정책의 효과를 구조 벡터자기회귀과정(Structural VAR, SVAR) 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했다. 중앙정부의 16개 기능별 분류 연도별 자료를 보간법을 이용해 분기별 자료로 변환해 분석했다. 실증 분석 결과 대부분의 모형에서 국방,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지출은 총소득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누적 재정 승수의 크기와 지속 기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다.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수경 국회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재정준칙으로 대응해야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지 밝히려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각국은 19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기존의 재정준칙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고, 나아가 경직된 재정준칙이 정부의 재정적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재정준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유연성을 보강한 재정준칙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것이 차세대 재정준칙이다. 그러나 이 역시 새로운 문제점을 노정하면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재정준칙이 필요해졌는데 그것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특성과 요건, 운영 메커니즘을 밝혔으며, 특히 차세대 재정준칙과 다른 5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그것은 중기 균형재정 준칙을 중심으로 제반 재정준칙을 운용하며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경제위기 상황 변

화에 대응해 평상시·위기 시·복원 시 준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하는 것이다. 셋째, 평상시에는 보다 강력한 흑자재정·균형재정 준칙을 확립해 향후 반복될 경제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넷째, 위기 시에는 예외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준칙들과 연계해 예외규정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위기 이후 복원 시에는 원래의 준칙 목표로 기민하게 복원하는 준칙을 운용하고, 특히 준칙 이탈 기간 중 발생한 재정적자를 반드시 상환하도록 준칙을 운용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준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하며 대응해야 국가부채의 급증을 제어하고 중기적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재정준칙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5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2020년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요건을 대부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위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새로운 재정준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과제

저자 —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는 「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 재정사업에서 사회적 가치가 핵심 성과관리 요소로 포함된다. 정부재정사업, 부처별 자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관리에서 평가지표와 평가 가점 요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된다. 그런데 정부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개념 정립과 제도체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각종 성과평가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경

제와 사회복지 재정사업에서는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를 통해 재정지출의 사회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시도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률안에 기초해 사회적가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실천방식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에 수립한 사회적가치기본계획의 내용에 기초해 사회복지 분야 정부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성과지표 개발과제를 모색했다. 사례대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선택했다.

이 글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정책에서 사회적 가치가 제도화된 맥락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을 정리했다.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논의됐던 사회적 가치 논의와 사업수행 현장 담당자들의 인식 상황을 분석했다. 셋째, 기획재정부 사회적가치기본계획에 기초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체계에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 성과지표를 모색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의 비판적 분석

저자 —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서 변경된 간이과세제도에 따른 과세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세수효과와 관련한 세법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과세체계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개정 후 간이과세제도에서 개정세법의 개편취지에 부합하도록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중복공제적 성격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의제매입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삭제하면서 과세유형에 부합하는 정확한 공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액의 전액으로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정 후 간이과세제도에서 개정세법의 개편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원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납부의무 면제의 기준을 개정 전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중복공제적 성격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대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에 비례하는 별도의 조세혜택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개정세법의 편의적 이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 인상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이후 최초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일반과세자의 새로운 과세기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법령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세통계연보의 부가가치세 집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계산하면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에 의한 세수효과는 각각 3,283억원 및 997억원으로 추정되어서 기획재정부 및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다 정확한 세수효과 분석을 위해 이들 분석결과의 근거 및 분석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위상 분석 및 평가

저자 — 주만수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

이 논문은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위상을 규명하고,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모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OECD 재정수입통계의 분류체계를 이용해 부동산보유세와 부동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 총조세 대비 비중, 그리고 민간 부동산 가치 대비 비중의 세 지표를 파악하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표를 보완한다.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는 대체로 OECD 국가들의 중간수준에 위치하며, 단지 민간 부동산 가치 대비 비중은 상향 편익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에 부동산거래세는 모든 지표에서 OECD 국가들의 최상위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 부동산 가치는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집계하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을 예시한다. 또한 부동산보유를 위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 측면에서 부동산거래세의 거래 빈도를 조정할 필요 없음을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부담이 높은 수준임에도 오히려 부담이 낮은 것으로 잘못 인식해 이 세제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누진체계를 강화했는데 이는 비논리적이다.

세법개정이 유발하는 정책효과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기여도 분석: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제1저자 — 채은동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교신저자 —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4년의 「소득세법」 개정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정을 거친 세법개정 중 하나다. 본 논문은 2014년 세법개정을 사례로 해 세법개정의 정책효과를 개정과정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세법개정의 효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2013년 세법을 기준선으로 해 이를 당시의 주요 3개 개정방안과 비교한다. 국세청 천분위 자료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면세자 인원, 세수 효과, 소득불평등도, 세 부담집중도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2014년의 사례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정부 원안이 가졌던 긍정적 효과의 많은 부분이 국회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면세자 비율이 증가하고 증세효과가 완화되는 등 약화됐다. 물론 구체적 효과는 분석의 대상

이 된 정책지표별로 다르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국회의 수정과정에서 확대됐는데, 이는 면세자 비율을 높이고 세수효과를 낮추며 세 부담 누진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었다.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제1저자 — 최경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교신저자 — 전희주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20년 말 기준 최근 3년간 주택연금에 가입한 총 29,960건을 대상으로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가격 변동을 고려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도해지시점 연령, 주택가격변동액, 대출 한도, 지급방식, 가입 기간, 지역, 주택면적의 총 7개 변수로 나타났다. 주택가격변동액은 중도해지시점 연령에 이어 중도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최근의 주택가격상승이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중도해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저가주택 가입자가 매월 수령하는 월 지급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 충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중도해지 완화를 위해서는 월 지급금 산정 시 사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 가정에 대한 차등적 적용, 월 지급금 지급방식 다양화,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도 요구된다. 또한 주택연금 보증금의 재정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도 주택가격 변동을 고려한 경험 중도해지율을 월 지급금 산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탄소중립의 역습, *Greenflation* ‘그린플레이션’

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폭과 속도가 예상롭지 않다. 지난해 1년 사이 천연가스는 268%, 석탄은 255% 올랐다. 알루미늄은 42%, 구리도 26% 올랐다. 특히 전기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리튬의 가격상승률은 무려 460%에 이르렀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다른 물가도 자극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글 양재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전기차 배터리 수요로 광물 원자재 가격 강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뛰는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도 있다.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반작용이다.

세계가 탈(脫)탄소·친환경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화석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른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의 역습’이다.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실질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물가를 압박하는 현상을 말한다.

리튬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테슬라를 필두로 내연기관 자동차 메이커들도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면서 리튬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해 가격이 치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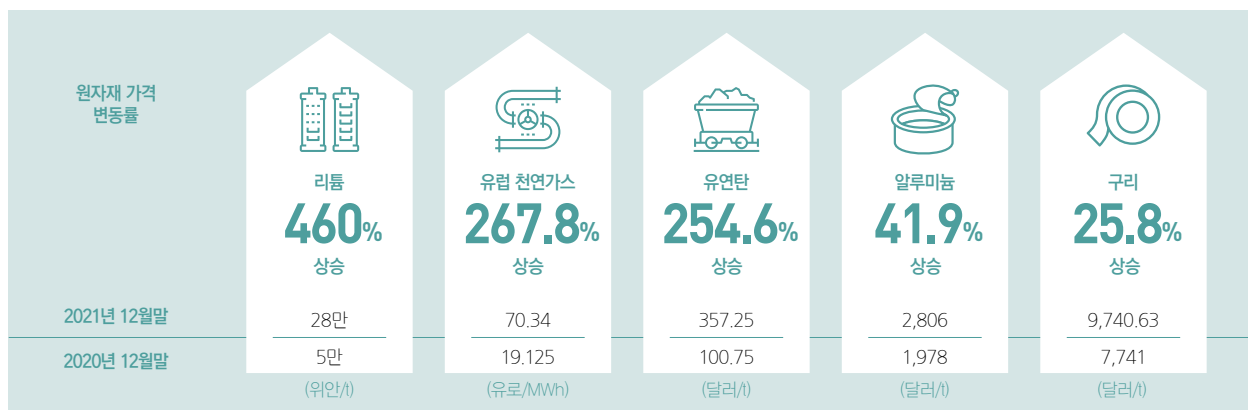
리튬 채굴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인허가 과정도 까다로워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 또한 채굴한 리튬을 배터리용으로 전환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리튬 매장량이 많은

칠레와 호주에서 채굴된 리튬은 대부분 중국에서 배터리 용으로 가공한 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되는 구조다. 전기차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원자재인 니켈도 최근 10년 새 가장 비싼 수준으로 올랐다(1월 14일 기준 t당 2만 2,850달러). 수요도 늘었지만 세계 최대 공급국인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최근 한 달 사이 가격이 약 12% 상승했다.

시장은 망간, 알루미늄, 코발트 등도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서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본다. 현재 전기차에 탑재되는 일반적인 배터리 팩은 리튬 8kg, 니켈 35kg, 망간 20kg, 코발트 14kg으로 이뤄져 있다. 누구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배터리 원료 소재 구성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들 광물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림 1 탈탄소·친환경 가속 과정에서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조달청,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린플레이션의 역습

지난해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 19 사태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이 문제였다. 유럽 국가들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석탄발전소를 대거 폐쇄하고 풍력발전소를 늘렸다. 그런데 지난해 북해의 바람이 약해져 풍력 발전량이 크게 줄었다. 이에 독일 등이 줄어든 풍력 발전량을 메우려고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했고, 전기요금도 덩달아 올랐다.

이처럼 리튬, 니켈, 천연가스 가격상승의 공통점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지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것이다. 전기차,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저탄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은 수요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가격까지 급등했다. 미중 간 마찰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중국이 미국 편에 선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그런데 중국이 마땅한 대체 수입처를 찾지 못하면서 석탄 가격이 올랐고, 원가 부담이 커진 발전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며 전력난을 초래했다.

게다가 2022년 2월 동계올림픽 때 전 세계에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에 규제를 가했다. 전력난이 심해지자 중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와 섬유공장, 대두 가공공장 등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감축했다.

미국 기업 애플과 테슬라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장들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전력공급 부족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직물과 기계부품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 제품의 가격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 화석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은 그린플레이션의 역습이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탄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의 문제

에너지 가격은 그동안 일정한 주기로 등락을 반복해 왔다. 에너지는 재고비용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초과되면 곧바로 가격 하락과 생산설비 투자 감소로 연결된다. 투자 감소는 시차를 두고 공급능력을 떨어뜨려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는 가격을 다시 올리는 순환 과정을 보여 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에너지 가격상승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딛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 순환적 성격도 있지만,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급체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이 적지 않아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탄소중립은 화석에너지의 퇴출을 의미한다. 그래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이 화석에너지는 사용량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가스의 역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문제는 2050년 이후 사용이 중단될지 모를 화석에너지 확보를 위해 나설 투자자가 그전보다 적다는 점이다.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의 회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이다. 특히 석탄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바람은 석탄의 공급능력을 빠르게 위축시킴으로써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도 다량의 금속을 필요로 한다. 태양광 패널에는 구리, 실리콘, 은, 아연 등이 들어간다. 풍력 발전기 제작에도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료가 사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대체하려면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8배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에 따라 관련 금속 수요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금속 채굴을

그림 2 에너지 유형별 발전비용

(단위: kWh당 원)



자료 IEA·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전력경영연구원

참고 2020년 기준. 수소는 발전원가 추정치

탄소중립은 화석에너지의 퇴출을 의미한다. 그래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이 화석에너지는 사용량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위한 광산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흑연에서 떼어내는 얇은 막인 그래핀과 코발트, 니켈 등은 공급과 수요 격차가 60%를 넘는다. 구리, 리튬, 플래티늄의 수급 격차는 40%다.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기후에 민감할 뿐더러 이를 통해 생산한 유휴 전력을 장기간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과 구축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 2020년 기준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용은 kWh당 각각 113원, 132원으로 원자력 발전의 두 배 수준이다.

최근 생산원가가 낮아지고 있지만, 화학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이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이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믹스(energy mix)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과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비싸진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역설적으로 경제회복을 지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이 비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해 물가가 오르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재화든 수요는 여전하거나 늘어나는데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더구나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상승은 비단 그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에너지와 각종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 가격도 인상됐다. 반도체 가격상승은 휴대폰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0%,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다. 같은 달 한국의 물가상승률(3.7%)도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한다. 탄소중립이 그린플레이션에 허를 찔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면 탄소중립 실현의 길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반작용과 역습을 살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적응하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



인플레이션과 재정

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시행한 대폭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수요 확대와 함께 원자재 가격급등과 물류 및 인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7%에 달했으며, 물가 폭등으로 대규모 소요사태가 촉발된 나라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0~1%대를 맴돌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작년에는 2.5%를 기록했으며 4분기에는 3%대로 꺾충 뛰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나 환율, 경제주체들의 기대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가 재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어떻게 조정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나 복지혜택의 실질적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국민 부담이나 혜택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과표구간 물가연동제나 사회보장급여의 물가조정 등을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누진세율과 세수 확대 및 재정배당

FISCAL DIVIDEND

인플레이션이 재정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 중의 하나는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세수 확대효과다. 경제성장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더 높은 구간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위 과표구간 상승효과(bracket creeping effect)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득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물론 경제성장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한 경우 이러한 세부담의 증가 및 세수 확대는 누진세율 체제에서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과표구간 상승효과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납세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세수 확대효과는 소위 재정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로 작용하게 된다. 경기 호황 시에는 정부로 귀속되는 세수가 확대되어 경기를 진정시키고 반대로 경기 불황 시에는 세수가 축소되어 경기를 진작하는 등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호황 시 증가한 세수로 인하여 재정흑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경제로 다시 환입되지 않는 경우 총수요 부족을 야기해 경제를 위축시키는 소위 재정장애(fiscal drag)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비판된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에 나타난 미국의 경기 위축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주장하는 케인즈 학파에서는 연방정부의 이러한 재정여력을 다시 경제로 되돌리는 정책, 소위 재정배당(fiscal dividend)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이던 W. Heller 교수는 이러한 재정배당의 일환으로 연방의 재정여력을 주와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 간 재정이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찬반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대

표적으로 연방정부와 달리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주나 지방 정부로 재원을 이전함으로써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정부 간의 정책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72년 일반세입교부금(GRS: General Revenue Sharing)의 도입으로 실현됐다. 우리의 지방교부세와 같이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보조금을 인구와 일인당 소득, 그리고 조세노력을 배분기준으로 주와 지방 정부로 이전했다. 이 제도는 1986년 최종 종료될 때까지 세 차례 연장됐는데, 15년 기간 동안 총 830억달러의 연방재원이 이전됐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지역관련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표구간 상승효과와 물가연동제

INDEXATION

인플레이션은 명목소득을 증가시켜 과표구간 상승효과를 야기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소득은 하락하는 반면 정부로 재원이 이전되는 소위 강제저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인적공제나 표준공제를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하는 등의 조치들을 간헐적으로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며 정부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며 인플레이션 효과가 자동적으로 보정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indexation) 도입이 필요하다.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의 정도를 세금 계산과정에 자동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해당 세법에서 의도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만약 관련 세목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상 등을 제도적

감세를 바탕으로 하는 공급중시의 경제학을 주창하며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경제회복조세법을 통해서 소득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물가연동의 필요성은 비단 소득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목에서 발견된다.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은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산과세에서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반대로 종량세 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소비과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물가연동제 도입 이전인 1974년 이후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두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인적공제를 일부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인플레이션 효과를 완화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빠른 과표구간 상승을 통해서 세 부담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 시기 10%의 물가상승은 약 16%의 소득세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세를 바탕으로 하는 공급중시의 경제학을 주창하며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경제회복조세법(the Economic Recovery Tax Act)을 통해서 소득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우선적으로 3년간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다음 1985년부터 그에 따른 적용이 추진됐다.

물가연동은 각 과표구간 소득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인적공제와 표준공제에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공제제도 자체가 중지되고 있다. 물가연동이 적용되는 대상은 계속 확대돼 현재 약 50개 이상의 항목에 적용되고 있다. 몇 가지를 들면, 최저한세의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 구간소득이나 인적공제 등에 물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 소득구간, IRA나 401(k), SEP 등 각종 퇴직연금 관련 기여금이나 연금혜택 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증여상속 통합공제(the unified gift and estate tax exemption)나 세대생략 이전세(the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의 기본공제 금액도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여상속 통합공제의 경우 2020년 11.58백만달러에서 2021년에는 11.7백만달러로, 그리고 2022년에는 12.06백만달러로 인상됐다.

물가연동의 기준이 되는 물가상승률은 2018년까지는 도시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U)가 적용됐으며 이후에는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쇄지수(Chained CPI-U)가 사용되고 있다. 연쇄지수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의 소비가중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수인상폭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사회보장 급여의 생계비 조정

COST-OF-LIVING ADJUSTMENT, COLA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고정된 연금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급여액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60년대 후반 이후 높은 물가상승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가조정의 제도화가 필요했고, 1975년부터 매년 자동적으로 사회보장 급여에 소비자물가상승을 고려한 생계비 조정(COLA)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법이 개정됐다.

한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과세대상 소득 한도도 인상된다. 사회보장세는 일정 한도 내 소득의 12.4%를 근로자와 사용자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과세대상 한도가 COLA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COLA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과세대상 소득의 실질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2021년 14만 2,800달러이던 과세대상 한도소득은 2022년에 14만 7,000달러로 인상됐다.

COLA는 노동통계국(BLS)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및 사무직 노동자 기준 CPI인 CPI-W(CPI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COLA의 계산은 전년도 제3분기 CPI-W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다음 연도 COLA가 되는 것이다. 1975년의 경우 8%의 COLA가 적용됐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에는 0%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연동은 각 과표구간 소득을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적공제와 표준공제에도 적용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에 적용되는 COLA는 5.9%로 발표됐다.

사회보장 혜택은 주로 고령층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COLA의 기준을 62세 이상 고령자의 소비가 중치를 반영하는 CPI-E(CPI for the Elderly)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노년층은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의료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 대상자의 20% 이상이 62세 미만자이며, 또 62세 이상 고령자의 20% 이상은 사회보장 대상자가 아닌 점 등과 함께 의료비 자체가 과대계상되고 있다는 다양한 찬반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맺으며

미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조세와 사회보장 급여 등을 물가상승과 연동함으로써 그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2021년 물가상승률인 2.5%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조세의 경우 자동적인 물가조정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 공제항목이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세제도의 물가연동제 도입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알면 알수록 돈 버는 연 | 말 | 정 | 산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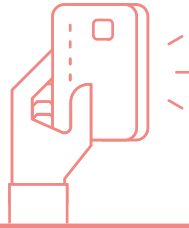
2021년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640,000원

2021년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1인당 평균 64만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올해에는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13월의 월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초보 직장인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떼가는데 연말정산을 왜 하느냐고 묻기도 한다. 직장인에게 정부는 1년 동안 '대략'의 세금을 걷는다. '원천징수'의 개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지출 패턴이 다르다. 그래서 1년 동안 세금과 공제 금액을 비교 계산한 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연말정산 기본 개념이다.

글 최용규 택스 코디네이터



2019년보다 지출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소비패턴, 결제방법에 따라 공제액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정부가 신용카드와 기부금 등의 소득·세액공제 부분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은 신용카드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에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만약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원래대로라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서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공제한다. 기존 263만원에 140만원 추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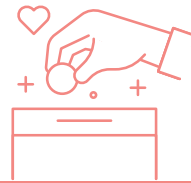
사람들은 저마다 지출 패턴이 다르다.

그래서 1년 동안 세금과 공제 금액을 비교 계산한

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연말정산 기본 개념이다.

득공제가 있지만, 403만원(263만원+140만원) 전액을 다 공제받을 수는 없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쳐 총 400만원이 공제 한도이기 때문이다. 즉 최종적으로는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소득공제액(263만원)보다 137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 확대

올해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변경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기부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올해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5%포인트 올라간다(이번 연말정산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법정 기부금 1,000만원과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원래 세액공제액은 210만원(1,000만원 × 15% + 200만원 × 30%)이다. 그러나 올해는 270만원(1,000만원 × 20% + 200만원 × 35%)으로 60만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당해연도에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이월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참고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반전세 전환 등으로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의 경우 12%, 5,500만원 이하는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 역시 일치해야 한다(다만, 월세를 살고 있어도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또한 세액공제가 되는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만약 총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은 90만원(750만원×12%)이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반전세 전환 등으로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의 경우 12%, 5,500만원 이하는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한도는 연 월세액 기준 750만원으로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원(월 62만 5,000원)까지만 해당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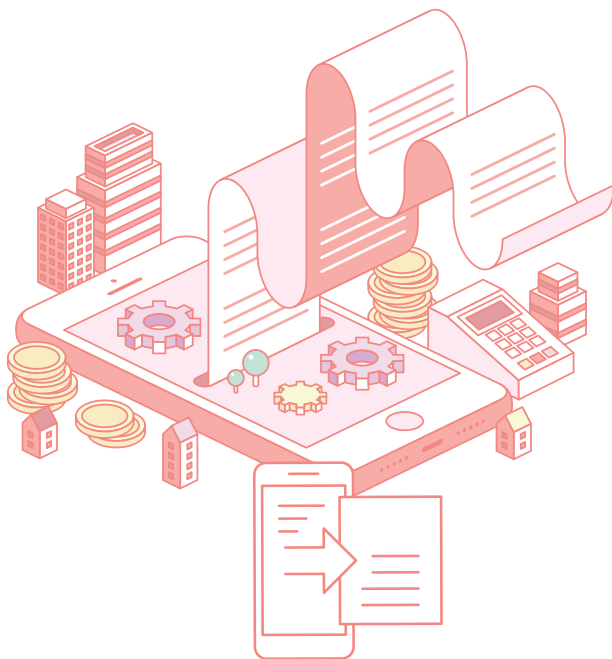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받는 법

- 세알못** 40대 중반인데 미혼이라 부양가족공제도 받기 힘든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 텍스 코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두 상품만 잘 활용해도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13.2~16.5%가 세액공제 된다(다만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과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6.5%의 세율로 분리 과세). 연금저축과 더불어 IRP에 추가 가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기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같은 한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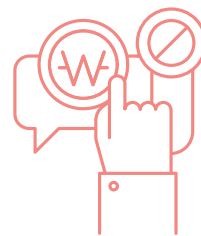




쉬워지는연말정산

종전에는 1월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근로자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종전처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¹⁾

1월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또 회사는 2월 말까지 근로자의 공제 신청 내용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턱대고 공제하면 오히려 세금 부과될 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직장인 A 씨는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오히려 수백만원을 더 내는 일이 발생했다. 근로소득이 없던 어머니가 그해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를 넣을 수 있는데 나이와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이는 미성년자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퇴직금과 주택, 주식 등의 양도소득도 포함된다. 다만 일용직으로 발생한 소득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중복 공제도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 모두를 또는 형제자매들이 각각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 신청자 중 한 명만 공제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과 대학원 교육비, 정치기부금 등은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공제되고 가족 명의로 된 것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에 포함한 것이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도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1)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월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서 동의해야 함.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삭제가 가능함. 또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월 19일까지 신청해야 함

탁월한 능력에 대한 찬사와
부정적인 평가를 오간 현실경제 정책가

Lawrence H. Summers

로렌스 서머스

로렌스 서머스는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으로 더욱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면서 클린턴 및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장관을 지냈고 또 하버드대학 총장직을 역임했다. 그러나 서머스는 독선적인 태도와 문제적 발언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를 감수하기도 했다. 현실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의 인생 행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글 **임성택**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명문가에서 태어나 경제학의 유망주로 면모 과시

서머스는 경제학 역사상 최대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그의 부친인 로버트 서머스는 경제학자였으며,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사무엘슨의 동생이었다. 서머스의 어머니 아니타 에로우 또한 여성 경제학자로 와튼스쿨과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일했다. 그녀의 오빠인 케네스 에로우는 일반균형 존재증명으로 경제학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큰아버지와 외삼촌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목격했으니 서머스가 경제학에 관심 갖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범상치 않은 집안 내력에 걸맞게 서머스는 16세에 MIT에 입학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그는 28세에 하버드 대학 사상 최연소로 종신교수직을 부여받아 경제학의 유망주로서 주목받았다.

의무적 복리후생제도로 노동시장의 재정적

효율성 증대 주장

서머스는 노동, 금융, 거시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주된 연구 분야는 재정학(public finance)이었다. 서머스의 대표적 연구 중 하나로 조세-편익 연계(tax-benefit linkages)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조세-편익 연계란 납부된 세금과 그 세금으로 제공되는 편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조세 징수와 복지지출을 별개로 다루는 대신, 고용자에게 징수한 세금을 곧바로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데 사용한다면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서머스는 ‘의무적 복지혜택(mandated benefit)’에 주목했다. 의무적 복지혜택이란 고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상해보험이나 육아휴직 등 사회보장성 혜택을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중앙재정에서 복지정책 예산을 배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기업에게 급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급여세(payroll tax)는 소득세와 달리 그 사용 목적이 정해

져 있는 세금으로, 미국에서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Medicare)에 사용할 목적으로 징수된다. 국내에는 4대 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편익 연계 효과를 명확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주에게 급여세를 부과해 근로자를 위한 상해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추가적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주는 ‘기존의 임금 수준 + 급여세’만큼 생산성이 유지되는 규모까지만 고용하고자 하므로, 노동시장에서 수요는 급여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급여세 부과에 대한 효과만 고려하면 노동시장에서 고용량과 임금이 감소하고, 특히 고용의 감소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과 시장왜곡을 발생시키게 된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조세부과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이다.

한편 상해보상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업무 중 부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치료비용이나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편익(benefit)으로 작용한다.

만약 상해보상제도가 없었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산재 위험과 그 비용을 감안해 자신이 희망하는 임금수준을 설정할 것이다. 그러나 상해보상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이러한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더 낮은 임금에서도 기꺼이 일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이제 노동시장에서 조세와 편익의 효과를 함께 감안해 연계효과를 살펴보자. 수요의 감소요인과 공급의 증가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면 임금은 기존 균형수준보다 크게 하락한다. 고용량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서머스는 근로자가 ‘의무적 수당’에 대해 얼마나 가치 있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

다고 지적했다. 만약 근로자가 상해보상제도에 대해 급여세 금액만큼의 가치를 느낀다면, 노동수요 감소만큼 노동공급이 증가해 고용량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사중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서머스는 중앙재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의무적 복리후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성을 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서머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냈으며 ‘경제학에 명백하게 기여한 40세 이전의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존 베이즈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재무부 국제관계 담당하며 정책가로서 걸은 출세기도

학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서머스는 이론가 보다는 야심적인 정책가에 더 가까웠다. 그는 198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두카키스의 대선캠프에 합류해 수석경제고문을 맡았으며, 그곳에서 진 스펔링과 로버트 루빈 등 고위급 정치계 인사들과 인맥을 구축했다. 이후 서머스는 세계은행의 수석경제학자에 임명됐으며, 2년 후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부 국제관계 담당 차관직에 올랐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응방안을 내리는 등 서머스는 풍부한 실전경험을 지닌 정책가로 거듭났다.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서머스에게 전화해서 묻곤 했다’고 회상했다. 재무부에서 두 사람을 보좌하고 훗날 뉴욕연준 총재를 거쳐 재무부 장관이 되는 티모시 가이트너는 ‘래리(로렌스 서머스의 애칭)와의 5분간의 대화가 다른 사람과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세가도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는 ‘리더십’이라는 위험요인이 있었다. 그의 천재적 두뇌의 반대급부는 지독한 오만함이었다. 서머스는 자신만큼 스

마트하지 못한 사람들(즉, 대부분의 사람들)을 종종 무시하고 화를 냈다. 공인으로서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경솔한 행동을 드러낸 그는 세련된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사회성이 부족한 너드(nerd)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의 해결사적 면모는 열성적 지지자들을 형성했지만, 서머스의 부족한 인망은 그에 대한 반대여론을 싹틔웠다.

서머스 자신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관인 로버트 루빈을 롤모델 삼아 스스로를 낮추는 겸양적인 태도와 상냥한 미소를 배웠다. 주변인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색했지만, 개선된 평판 덕분인지 그는 루빈의 후임으로 재무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임기를 마친 후 하버드 대학의 총장직을 맡는 등 그의 커리어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화려한 커리어만큼 끊이지 않은 구설수

총장직에 오른 서머스는 유서 깊지만 그만큼 정체된 하버드를 의욕적으로 개혁했다. 졸업생의 90%가 우수상을 받는 평점제도의 현실화, 좀 더 젊은 교수진, 교환학생 프로그램 통한 재학생들의 경험 확장, 생명과학 분야 육성과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장 등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학생들과 소통을 중요시 여긴 서머스는 재학생들에게는 지지를 받았지만, 고강도의 개혁 드라이브 정책은 교수자들, 특히 인문대 교수들과 갈등을 초래했다. 스타 교수인 코넬 웨스트의 품위 문제로 촉발된 갈등은 리더로서 서머스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머스는 어떤 컨퍼런스에서 ‘과학과 공학 부문에서 성공한 여성이 적은 이유’에 대해 논의하다 여성이 수학 및 과학 성적이 낮은 이유는 선천적 차이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고 말았다. 이는 여성차별적 인식으로 비춰져 서머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폈으며, 결국 역대 하버드 총장 중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과 함께 자진사퇴 할 수밖에 없었다.



로렌스 서머스가 경제학자 학위를 받고 최연소로 중신교수직을 받은 하버드 대학

서머스는 이처럼 본인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잦았는데, 과거 세계은행에서 일할 때 ‘공해 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에 서명한 것이 발견되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총장 사임 이후 그의 커리어는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인다. 오바마 정권에서 서머스는 재무장관보다는 영향력이 낮게 평가되는 국가경제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경제문제의 해결사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했다. 머지않아 서머스가 권토중래할 기회가 찾아왔다. 연준 의장 버냉키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차기 의장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온 서머스였으나, 반대 여론도 거셌다. 서머스의 과거 기행과 실언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으며, 재무부 차관 시절 서머스의 주도로 폐지된 ‘글래스-스티걸 법(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시키는 법안으로 대공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1933년에 제정됨)’이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금융위기 책임론’도 제기됐다. 결국 서머스는 대통령에게 연준의장

각국이 자국 입장만을 고려한

재정·통화정책을 펼치는 한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환경 규제를 완화하면서

‘바닥을 위한 경주’를 벌이고 있으므로

‘중산층의 생활수준 개선을 목표로

국제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보에서 사임하겠다는 편지를 썼다.

강단에 다시 돌아온 서머스는 학문적 관심사를 세계화(globalization)로 돌렸다. 그는 과거부터 세계화가 중산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에 들어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서머스는 단순한 자유무역만이 아닌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포퓰리즘과 자국 우선주의가 정치적으로 득세하게 된 것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추진된 세계화정책이 유권자들에게는 중산층·저소득층을 고려하지 않는 엘리트주의의 결과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이 자국 입장만을 고려한 재정·통화정책을 펼치는 한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환경 규제를 완화하면서 ‘바닥을 위한 경주’를 벌이고 있으므로 ‘중산층의 생활수준 개선을 목표로 국제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머스는 경솔함과 오만함 때문에 부정적 여론을 자초했지만, 탁월한 두뇌와 현실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다시 정책입안자로 활약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NABO NEWS

01 2022년도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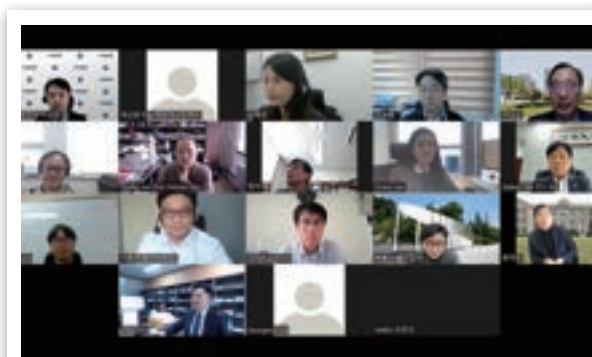
NABO는 지난 1월 26일(수) 국회 소속기관들과 함께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임익상 처장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제21대 국회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효과적·중립적 의정활동 지원’, ‘민생 중심 실용적 연구·분석’, ‘미래비전 연구 및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이라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해 세종시에 소재한 재정·경제 분야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주요 국외 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02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 재정경제부 직원 면담



NABO는 지난 2021년 12월 1일(수)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재정경제부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사르완 이스마엘 아흐메드 갈리(Sarwen Ismael Ahmed Galali) 단장 등 7명의 KRG 대표단과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안수지 예산분석관, 박선아 추계세제분석관 등이 참여해, 한국의 예산제도 및 국회 예산과정에서 NABO의 역할, 건강보험의 구조와 재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03 예산정책연구 제6기 학술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1차 편집위원회 개최



NABO는 지난 2월 14일(월) 2022년도 제1차 예산정책연구 학술지편집위원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하연섭 위원장 등 14인의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편집위원회 소개, 2021년 활동 및 2022년 발간 보고로 진행됐다. 올해는 예산정책연구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향후 학술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2022년 3월 2일(수)~3월 15일(화)

전시작품
〈오광심 지사 초상화〉 등 총 20점

작가
정삼선 외 19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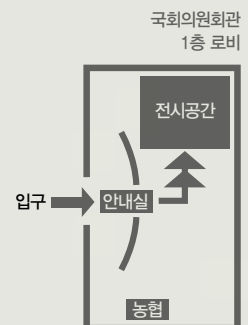


Moment of Tree

2022년 3월 16일(수) ~ 3월 31일(목)

전시작품
〈Moment of tree〉 등 총 16점

작가
조미향



문의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02-6788-4394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위원회별 통계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엄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 간 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 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NABO Quiz

함께 만들어가는 기간지 <예산춘추>의
재정·경제 관련 퀴즈를 풀면서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답자를 추첨하여 상품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

mhggam@naver.com

문의

NABO 기획예산담당관실
02-6788-4619

독자퀴즈 응모 기간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선물 수령(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위해서는 응모 시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QUIZ 01

특집에서 다룬 <2022 예산은 '2% 부족한' 마스터플랜> 칼럼 중
“정부의 올해 기후위기 관련 예산은 11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7조 3천억원보다 〇〇% 이상 늘었다.”에서 〇〇에 들어갈 숫자
는 무엇일까요?

- ① 45 ② 53 ③ 60 ④ 74 ⑤ 88

Hint! 20-25페이지를 확인하세요.

QUIZ 02

현안진단에서 소개한 <디지털세 최종합의의 의미와 대응과제>
칼럼에서 디지털 경제 정의의 핵심요소 세 가지를 모두 고르세요.

- ① infrastructure ② bitcoin ③ E-commerce
④ priced digital services ⑤ digital twin

Hint! 34-39페이지를 확인하세요.

QUIZ 03

재정·경제학자 이야기 칼럼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장
관을 지내고 하버드대학 총장직을 역임한 현실경제 정책가인 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재닛 옐런 ② 리처드 클라리다 ③ 스티븐 로치
④ 로런스 배카우 ⑤ 로렌스 서머스

Hint! 100-103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본 칼럼에 대한 의견이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보내주시면 독자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의견이 「예산춘추」를 더욱 알차게 합니다.



건전한재정 희망찬미래